

한국전쟁 70년

‘용산 전쟁기념관 한국전쟁 관련 전시내용 변화를 위한’

<정 책 제 안 서>

2020년 6월 25일

## 한국전쟁 70년

‘용산 전쟁기념관 한국전쟁 관련 전시내용 변화를 위한’

# <정 책 제 안 서>

<작성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사무국>

- 담당 : 상임활동가 박석진 <010-5405-3225>
- Tel:02-338-0426 / E-mail:[watch@militarywatch.or.kr](mailto:watch@militarywatch.or.kr) / [www.militarywatch.or.kr](http://www.militarywatch.or.kr)
- :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6-1, 3층

<제안서 자문 : 용산 전쟁기념관 전시내용 변화를 위한 운동 자문위원그룹>

- 강성현(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교수)/김명희(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김민환(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교수)/박강배(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사업 단장)/심아정(독립연구활동가)/염운옥(경희대학교 학술연구교수)/이동기(강릉원주대학교 사학과 교수)/이임하(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교수)/임재성(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전갑생(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전진성(부산교육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조정아(역사교사)/최선영(『냉전의 공간화와 기호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발표, 2016. 현 박사과정)

<공동제안단체>

-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사)제주다크투어/(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4·9 통일평화재단/NCCK 화해통일위원회/경계를넘어/군인권센터/금정굴인권평화재단/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대안문화연대/두레방/문화연대/민들레-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민족문제연구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섬돌향린교회/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식민지역사박물관/아시아평화인권연대/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교육센터 들/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인권운동사랑방/인권중심사람/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JPIC/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쟁없는세상/제주평화인권센터/천주교 인권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평택평화센터/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바람/평화재향군인회/피스모모/한베평화재단/향린교회 (가나다순, 총 43개 단체)

2020년 6월 25일

국방부장관 귀중

## <목 차>

### I. 정책제안의 취지 및 방향

1. 용산 전쟁기념관 한국전쟁 관련 전시내용 변화의 필요성 - 4p
2. 용산 전쟁기념관 명칭 변경과 관련해 드리는 제안 - 6p

### II. 정책제안의 세부내용

1. <6.25전쟁실 I>에서의 변화 제안 - 9p
2. <6.25전쟁실 II>에서의 변화 제안 - 21p
3. 6.25전쟁실에 추가되어야 할 항목 제안 - 30p
4. 해외파병실 전시내용의 문제점과 변화 제안 - 40p

### III. 정책제안서를 마치며 - 42p

[참고문헌] - 45p

# I. 정책제안의 취지 및 방향

## 1. 용산 전쟁기념관 한국전쟁 관련 전시내용 변화의 필요성

올 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회 전반에 한국전쟁을 다시 기억하고 재해석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차원으로 준비되는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의 사업에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 합동추모제, 노근리 사건 70주년 추모제 등 의미 있는 행사가 눈에 띕니다. 이는 행사의 목적에서 밝히고 있듯이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고 있는 용산 전쟁기념관의 한국전쟁과 관련된 전시는 이와 같은 변화의 움직임을 외면한 채 한국전쟁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배제와 왜곡으로 가득합니다.

이하에서는 용산 전쟁기념관 전시내용 변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 1) 군대의 관점 중심의 전시, 민간인(시민)의 입장을 배제

용산 전쟁기념관을 들어서는 양쪽 회랑에는 한국전쟁 당시 숨진 한국군과 유엔 참전국 군인들의 명단이 거대한 동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전시실로 들어서며 호국추모실에서 관람객이 처음 만나는 전시 역시 전사자 명부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군인들의 죽음도 마땅히 기억되어야 하지만 그에 준해 민간인들의 희생과 죽음도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용산 전쟁기념관 전체 전시내용에서 민간인의 희생과 학살을 다룬 부분은 지극히 미미하며 그나마의 내용도 북한군에 의한 학살과 피해의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이하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뿐 아니라 국군과 경찰 그리고 미군에 의해서도 수많은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국민보도연맹 학살사건, 부역 혐의 민간인 학살사건, 후방작전의 일환으로 전개된 빨치산 토벌과정에서 군경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노근리 학살사건 등 수많은 민간인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 중 여러 사건은 국가 차원에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쟁기념관의 한국전쟁 전시 중 대부분의 내용은 전투와 관련된 것입니다. 전투 중심의 전시 구성은 전쟁이 군인만의 일이라는 관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군인뿐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공간이 존재했던 모든 이들이 겪었던 일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민간인 학살뿐 아니라 피란과 점령 등 과정에서 시민이 겪은 전쟁의 모습, 특히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전쟁의 모습 등 다양한 전쟁 당사자

가 겪은 전쟁의 모습이 전시되어야 함에도, 전쟁기념관은 이 같은 사실들을 전시 내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기념관 전시의 말미에 전쟁의 참담한 고통을 다시 후손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고 결론내고 있는 취지와도 어긋납니다. 한국전쟁과 같은 참화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군인의 희생 뿐 아니라 민간의 관점에서 본 전쟁의 모습을 전시해 관람자가 다양한 전쟁 당사자들이 겪은 전쟁에서의 고통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의 피해와 고통도 기억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평가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2) 무기와 전투 중심의 전시를 통한 전쟁 미화

용산 전쟁기념관의 곳곳에는 한국전쟁 당시 사용된 온갖 무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의 말미 부분인 국군발전실에는 최신 무기들을 집합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무기 전시의 어떤 부분에도 인명을 살상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오라마와 시뮬레이션 등의 기법을 동원해 구현하고 있는 수많은 전투내용과 관련된 전시에서도 그 전투의 과정에서 죽거나 숨진 군인들의 고통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고지쟁탈전을 설명한 전시에서도 2년여의 기간 동안 진행된 전투를 통해 희생된 군인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 없이 고지쟁탈전을 통해 국군이 성장하고 발전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쟁기념관의 전시 내용은 전쟁의 고통을 통해 전쟁을 방지하려는 의도보다는 온갖 무기 전시를 통해서 힘에 의한 평화를, 전투를 통해서 군대의 성장을 말한다는 점에서 전쟁의 예방 및 방지보다는 전쟁을 미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3) 밝혀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외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7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군대 등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등 사실이 밝혀져왔고 또 진실규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기념관의 전시내용에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일례로 전쟁기념관은 제주 4.3을 한국전쟁의 전사(前史)로 설명하면서 여전히 좌익세력의 무장투쟁이나 단독선거 방해 책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 4.3의 경우 대통령 차원에서 여러 차례 국가권력의 잘못으로 인정되었고 현재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쟁기념관의 전시내용은 한국전쟁 당시 국가권력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학살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와도 배치됩니다. 현 정부는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해 진실규명과 그에 따른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당시 국가권력에 의해 발생한 많은 민간인 학살 및 피해사건의 조사결과보고서에서 권고사항으로 평화인권교육의 강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가가 군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제인도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시인권교육을 강화할 것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1년에 2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전쟁기념관을 관람하며 그 중 70만 명 이상은 어린이와 청소년기의 학생들입니다.<sup>1)</sup> 한국 현대사의 큰 아픔이었던 한국전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라도 전쟁기념관 전시내용의 변화는 꼭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 4) 남북의 평화를 위한 노력 사실의 배제

한국전쟁 이후 70여년의 시간동안 남과 북 간에 적대와 갈등의 역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953년 7월에 체결된 정전협정 제60조는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의를 규정하고 있었고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측 노력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은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당국이 통일과 관련해 합의한 내용으로 지속성을 담보하진 못했지만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통일의 대원칙을 표방한 바 있습니다.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이어 발효된 남북 기본합의서는 상호 체제 인정과 상호 불가침, 교류 및 협력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2000년 최초로 남북 정상 이 만나 합의한 6·15 공동선언은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통일방안의 공통점 인정 등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2007년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10·4선언은 615선언 내용의 재확인과 더불어 종전선언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전개된 평화정세는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며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전쟁기념관은 위와 같은 평화를 위한 남과 북의 노력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전시의 말미에 북한의 도발만을 연도별로 전시해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시내용은 북한에 대한 경계심과 적대감을 형성하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으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의 방법을 모색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쟁을 멈추고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들이 전시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용산 전쟁기념관 명칭 변경과 관련해 드리는 제안

용산 전쟁기념관 전시내용의 문제점 및 대안과 관련한 세부적인 의견을 드리기에 앞서 우선 현재의 명칭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과 대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단체는 지난 2016년부터 한국전쟁 발발일에 즈음하여 시민들과 함께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전쟁기념관 다시보기 해설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전쟁기념관의 전시내용을 돌아보며 시민들과 함께 전쟁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평화를 위해 어떤 일들이 필요할지

### 1) 전쟁기념관 관람객 현황 (2010~2018)

구분	계	일반	장병	청소년	유치원	외국인
2010년	1,334,861	902,728	15,821	303,363	33,182	79,767
2011년	1,538,903	895,461	36,697	401,862	95,822	109,061
2012년	1,786,481	992,489	60,795	410,349	183,828	139,020
2013년	2,095,121	1,193,023	48,563	454,711	262,483	136,341
2014년	2,017,733	1,190,657	48,261	385,174	250,052	143,589
2015년	2,151,702	1,413,970	47,619	400,702	173,193	116,218
2016년	2,089,501	1,256,489	40,792	428,821	205,120	158,279
2017년	1,925,663	1,078,682	47,329	468,462	174,805	156,385
2018년	2,379,672	1,499,708	41,829	588,699	125,419	124,017

<이 표는 2019년 5월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전쟁기념관측이 공개한 자료임>

를 생각해보는 행사입니다. 용산 전쟁기념관의 전시를 둘러 본 시민들 대부분은 전쟁기념관이라는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기념’은 좋은 일, 의미 있는 일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인데 한국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인 한국전쟁과 관련된 전시가 중심인 곳에 기념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전쟁기념관이 건립되던 당시에 유사한 문제제기들이 있었고 언론인, 역사학자 등 자문을 했던 분들도 군사박물관 등 다른 명칭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sup>2)</sup> 사전적인 의미는 아니나 기념관이 어떤 대상에 대한 기림, 추모를 중심적 가치에 둔다면 박물관은 사실적 전시를 통한 논쟁과 토론이 가능한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한국전쟁과 관련한 여러 사안들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논쟁적인 요소로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제기한 전쟁기념관 전시의 문제점과 관련한 제안 등을 감안해도 전쟁기념관이라는 명칭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는 전쟁기념관의 명칭을 ‘인권과 평화를 위한 전쟁박물관’과 같은 평화지향적인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제안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2) 최선영, 『냉전의 공간화와 기호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33~34p

## II. 정책제안의 세부내용

'이 법은 전쟁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쟁기념사업회법 1조의 내용입니다. 전쟁을 기억하는 이유가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적 수단에 의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다시 겪어선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칩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인명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투와 함께, 민간인 학살과 전시성폭력, 강제동원과 같은 전쟁범죄도 동반합니다. '전쟁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합리화는 오히려 전쟁 본연의 상태가 반인권적일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참상은 정당화되어선 안 됩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기억하는 것은, 전쟁의 모든 피해자들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민간인들의 피해를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것은 그들을 애도와 추모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1조에서 말하는 전쟁의 교훈, 즉 전쟁기억의 내용이란 전쟁의 참혹함과 전쟁이 가질 수밖에 없는 반인권성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다시는 전쟁을 겪지 않기 위해 필요한 평화적 방안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전쟁기념관의 전시목적이 '전쟁예방'임에도 위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수정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목록은 위 기준을 가지고 평가했을 때, 수정되어야 한다고 제안 드리는 전쟁기념관의 전시 항목입니다.

전쟁기념관 전시 내용 변화를 위한 제안서 체크리스트		
번호	항목	체크
	<b>6.25전쟁실 I</b>	
01	한국전쟁 발발에 대한 편향된 기술과 주요사실의 배제	
02	제주4.3과 여순사건에 대한 왜곡된 기술과 사실의 배제	
03	노량진 전투 디오라마 전시와 관련한 왜곡과 사실의 배제	
04	인천상륙작전 과정 및 미군의 폭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사실에 대한 배제	
	<b>6.25전쟁실 II</b>	
05	멈출 수 있었던 전투, 고지전과 그로 인한 피해사실의 배제	



06	한국전쟁 당시 노무동원의 비인도적 상황에 대한 배제	
07	이념전 및 심리전의 대상이 된 포로상황과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조치에 대한 재평가	
	<b>추가되어야 할 전시 내용</b>	
08	한국전쟁 시 예비검속과 보도연맹, 부역혐의자 학살 등 국가에 의한 민간인 학살	
09	한국전쟁 시 한국군·경과 미군 작전에 의한 민간인 학살	
10	한국전쟁 시 한국군 ‘위안부’와 연합군 ‘위안부’ 운용 등 전시성폭력	
	<b>해외파병실</b>	
11	베트남전쟁과 관련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실의 배제	

관련해 이하에서 제안 드리는 세부적인 정책제안 내용에 대해 검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1. <6.25전쟁실 I>에서의 변화 제안

### 1) 한국전쟁 발발에 대한 편향된 기술과 주요사실의 배제

한국전쟁의 발발과 관련한 전쟁기념관의 주요한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김일성, 스탈린, 마오쩌둥의 남침모의

1949년부터 김일성은 소련의 최고 지도자인 스탈린에게 남한 침략을 승인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 미국과의 충돌을 원치 않았던 스탈린은 남한이 먼저 공격해 올 경우에만 반격할 수 있다고 김일성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나 소련의 원폭 실험 성공, 중국대륙의 공산화 등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스탈린도 입장을 바꾸었고 1950년 3월 말부터 한 달간 김일성과 3차례 회담을 통해 남침 전쟁을 승인했다. 스탈린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 중국 공산당 주석인 마오쩌둥의 동의를 받도록 조건을 달았다. 1950년 5월 13일 마오쩌둥을 방문한 김일성은 스탈린과 합의한 내용을 보고하고 협력을 요청하였다. 마오쩌둥은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소련과 북한의 지원을 받은 바 있었기 때문에 동의하고 미군이 참전할 경우 지원을 약속하였다.

전쟁을 일으키기 앞서 남한을 혼란시킨 북한  
남한의 군사력을 분산시킨 좌익 활동과 남파계렬라 활동

### 38선에서 북한군의 도발

소련은 전쟁에 대비해 처음부터 북한군을 정규군으로 조직하였다. 반면 미군은 치안 유지 및 경비임무에 중점을 두고 국군을 경찰예비대로 편성하였다. 소련으로부터 38선 경비임무를 먼저 인수한 북한군은 국군을 상대로 도발을 일삼았다. 1949년 3월 중순부터는 무력충돌이 수시로 발생하였다. 대부분 양측 경비병력 간의 소규모 충돌이었지만 보병대대급 전투로 확대된 경우도 있었다. 1949년 5월에는 개성, 용진, 춘천 등지에서 보다 큰 규모의 전투가 여러 차례 발발하였다. 특히 개성 북동쪽의 292 고지전투와 서북쪽의 송악산 전투는 거의 전쟁 수준이었다.

### 중무장한 북한군의 포성이 평화롭던 새벽을 깨우다

1950년 봄, 북한군은 소련 군사고문단의 지도를 받아 남한을 침략하기 위한 ‘선제타격계획’을 완료하였다. 6월 12일부터 공격을 위한 부대 이동을 시작하여, 남침 명령이 내려진 6월 22일에는 이미 전 부대가 전쟁 준비를 마치고 전선에 대기하고 있었다.

당시 국군은 노동절(5.1), 국회의원선거(5.30), 위장평화공세(6.10)에 대응한 비상경계령으로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농촌에서 일손마저 부족해지자 육군본부는 6월 24일 비상경계령을 해제하여 많은 장병들이 휴가, 외출, 외박을 나갔다. 그래서 전쟁 직전 대부분의 부대에는 1/2 정도의 병력만이 남게 되었다. 그날 밤에는 장교클럽 개관식이 열려 새벽녘에 연회가 끝났다. 북한군의 남침사실이 알려진 6월 25일 아침에는 군 수뇌부 등 고위 장교 대부분이 늦잠에 빠져 있었다.

### <전쟁기념관의 전시내용 및 기술에 대한 문제제기와 제안>

전쟁기념관의 한국전쟁 발발과 관련한 기술의 주요 내용은 북·중·소의 남침모의, 북한군의 지속적 도발, 기습 남침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은 지속적인 갈등의 심화 과정에서 발생하며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전쟁기념관의 전시에도 간략히 언급되어 있긴 하지만 1945년 해방 이후 미·소를 중심으로 이념적 대결로 나아가던 국제정세, 미소의 한반도 분할 점령 등 외적 요소와 남과 북 모두 독자적 정부수립으로 나아가며 심화되던 내적 정치적 갈등 등이 전쟁의 발발에 복합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의 갈등이 지속적인 군사적 충돌로 이어져 한반도에 준 전시 상태의 군사적 긴장이 존재했었다는 것입니다.

관련해 전쟁기념관은 당시 38선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북한군의 도발에 의한 것으로만 기술하고 있으나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쟁 전 남과 북은 상호 서로에 대한 공격적 군사행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sup>3)</sup> 관련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발간한 『6·25전쟁사』에는 1949년 5월 당

3) 북한은 1949년 1월부터 9월까지 남한이 432회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남한은 유사한 시기 북한이 563회 침범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정병준, 2006년, 돌베

시 춘천에 주둔하던 국군 제8연대가 월북한다며 북한군을 유인하고 북쪽지역에 기습공격을 진행해 북한군 100명 이상을 사살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sup>4)</sup> 같은 해 2월에는 강원도 양양지역에 주둔하던 제10연대가 이북지역에 포격을 가해 북한군 해군파견대 건물을 파괴한 사실을 미 군사고문단 측에서 확인하고 중대하게 문제 삼은 바 있으며<sup>5)</sup> 10월에는 북한군 인민유격대 훈련소를 공격한 것과 관련해 그 책임을 물어 연대장이 해임된 바도 있습니다.<sup>6)</sup>

전쟁기념관의 기술처럼 북한이 남침을 위한 전쟁준비를 하고 있었던 반면 남한에서는 당시 대통령이던 이승만이 공공연하게 북진통일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당시 한반도의 상황은 남과 북이 서로 군사적 방식을 통한 통일을 추구하고 있었고 38도선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어 언제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쟁의 원인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그 같은 과정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중요한 일입니다.

계>

- 4) 춘천 주둔 제8연대의 강.표대위의 월북사건과 계속되는 북한군의 산발적 침공에 충격을 받은 제1연대(연대장 김종오 대령)는 기회만 있으면 북한군을 유인해 섬멸하고자 했다. 연대장 김종오대령은 정보국 소속의 연대 정보주임인 김창룡 대위와 논의 끝에 38선을 왕래하는 이중첩자에게 제1연대의 1개 중대가 1949년 5월 8일 월북하겠으니 엄호병력을 연곡 방면에 대기시켜 달라고 통첩하였다. 북한 측에서 강.표 소령의 월북사건이 있던 직후라 첩자가 제공한 첩보를 그대로 믿고 평양의 정치보위부 책임자가 직접 나와서 엄호부대를 배치하고 보도진이 대기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김종오대령은 1개 중대를 차량화하여 사직리 방면에서 월북하는 양 기만하고 2개 중대는 국망봉 하단 능선을 우회 침투하여 심재부락에서 북한군의 엄호병력을 차단하고 1개 소대가 만가대 부근에 매복하여 기습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연대장 단독 계획으로 상부에 건의하지 않은 것이었다. 5월 7일 20:00에 2개 중대는 경장비로 국망봉에 침투 우회하였는데 야간훈련의 미숙과 방향유지의 곤란으로 인해 알게 우회하다가 03:00에 북한군에게 발견되어 교전이 전개되었다. 그 무렵 사직리에는 1개 중대가 차량의 라이트를 명멸시키면서 월북하는 양 행동을 하고 있었고 북한군 측에서도 신호를 하여 서로 무언의 협조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38선 북방 3km 지점에서 교전이 전개됨으로써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연대장은 무전으로 침투부대에 후퇴명령을 내렸는데 3명이 전사하고 수명의 부상자를 내고서 05:00에 복귀하였다. 한편 만가대에 매복 중이던 1개 소대(최영두 소위)는 교신 불능으로 후퇴를 하지 못하고 보리밭에 음폐하고 있었는데 날이 밝기 시작하자 북한군측이 퇴각하기 위해 차량에 승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최소위의 1개 소대는 최소위의 판단하에 200m 거리에서 일제히 집중사격을 가하여 북한군 1개 중대병력을 섬멸하였다. 이 공격으로 최소위의 소대는 104명을 사살하고 13명을 생포하였으며 총기 100여정, 기관총 1정을 노획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 2004, 511-512p>
- 5) 제10연대장 백남권 중령은 연대에 배속된 105mm M3 곡사포 2문을 노재현 대위 지휘 하에 38선에 급파하였다. 노대위는 대위는 인구리 북방의 해안선에서 기사문리의 적 해군파견대를 목표로 하여 포격을 가했는데 포경이 없어서 직경조준으로 5발을 발사해 건물을 파괴하였다. 이 포격은 38 이북지역에 대한 최초의 105m포격이었다. 이 포격사건을 탐지한 미 군사고문단 측에서 이를 중대시하고 직접 조사를 하여 육군본부 참모회의에 상정하였다. 그러나 회의에서 포병단장 장은산 중령이 정당방위를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일단락 되었지만 미 고문단 측에서는 북한과의 충돌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조치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535p>
- 6) 양양에는 인민유격대를 재훈련시키는 훈련소가 설치되어 이미 제3차에 걸쳐 유격대가 남파되었다. 강릉지구를 방어하고 있던 제10연대장 송요찬 중령은 양양의 소위 인민유격대 훈련소를 공격하여 그들의 근거지를 분쇄하려고 결심하였다. 1949년 7월 3일 연대장 송요찬 대령은 주문진에 주둔하고 있던 제1대대장 고백규 소령을 불러 7월 4일 양양을 공격해 북한군의 군사시설을 파괴하라고 명령하였다. 7월 4일 고백규 소령이 지휘하는 제1대대는 처음으로 보급된 M1소총을 장비하고 09:00시에 양양 남대천 부분의 80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양양에서 후퇴한 북한군은 어선에 분승하여 해상으로 침투하고 일부병력이 우회하여 협공을 가하여 왔다. 후퇴명령을 받지 못한 제1중대는 북한군의 공격을 받고서 분산하여 각개 후퇴함으로써 상당한 인원, 병기손실을 초래하였다. 양양 공격사건은 육군본부와 미 군사고문단측에서 중대시하고 진상조사를 하여 사문(査問)에 회부하였다. 격론이 벌어진 끝에 남파 유격대 근거지를 파괴하고자 했다는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얻었지만 지휘체계를 문란시켰다는 이유로 연대장이 해임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536-538p>

현재 전쟁기념관의 기술처럼 어느 일방의 기습 침략으로 전쟁의 원인을 분석할 경우 그 대책은 힘을 길러 유사시의 침략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적대와 힘에 의한 평화는 지난 70년의 경험에서 드러났듯이 지속적인 군사적 충돌과 전쟁위기의 상시화를 초래할 뿐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군사적 갈등과 충돌이 한국전쟁의 원인이었다 분석할 경우 군사적 갈등과 충돌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2018년 이후 남과 북이 대화의 장을 열고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논의가 진행 중일 때 전쟁위기가 감소한 경험은 이를 뒷받침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전쟁기념관의 전쟁의 발발 원인과 관련한 기술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이지 않으며 이를 통해 관람객에게 형성되는 인식의 측면에서 평화적이지 않습니다.

이상에서 언급된 내용이 반영된 내용으로 전시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2) 제주4.3과 여순사건에 대한 편향된 기술과 사실의 배제

### 남한의 전투력을 소모시키기 위한 좌익과 게릴라의 무장투쟁

신탁통치 문제로 이념 대립이 격화되면서 남한 곳곳에서는 좌익세력의 주도로 무장투쟁이 발생하였다. 특히 1948년 4월, 제주도에서 발생한 4.3사건으로 군경은 물론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다. 10월 19일에는 제주도의 무장세력 토벌을 위해 출동 명령을 받은 제14연대가 내부 공산 세력의 선동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한때 여수, 순천 일대가 이들에게 점령되었다가 27일 진압군에 의해 탈환되었다. 하지만 반란군이 덕유산으로 들어가 계속 저항하면서 피해가 크게 확산되었으며, 또한 북한에서 내려온 게릴라들도 후방을 어지럽혔다. 북한은 1948년 11월부터 6.25 전쟁 직전까지 게릴라 2,400여 명을 남한에 침투시켰고, 이를 진압하느라 국군의 전력의 분산된 탓에 6.25전쟁이 발발할 당시에는 38선을 방어할 병력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공산세력은 전쟁을 일으키기에 앞서 남한 내부에 혼란을 일으켜 전투력의 소모를 유도하였다.

### <전쟁기념관의 전시내용 및 기술에 대한 문제제기와 제안>

제주 4.3에 대해서는 2000년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진상규명 활동이 시작돼 200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차원에서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공식 사과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18년 제주 70주년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모든 고통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중단 없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4월 3일에는 국방부 차원에서의 사과 표명도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제주 4·3 특별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진압과정에서 제주도민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으며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4·3 희생자 유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방부도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현재 4.3희생자 추념일은 2014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순사건 또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 2005년 통과된 후 출범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위원회에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으로 분류돼 국가 차원의 민간인 집단학살이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여순사건 당시 사형을 선고받고 사망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을 결정하면서 국가가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인을 살상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용산 전쟁기념관은 제주4.3과 여순사건을 ‘남한의 전투력을 소모시키기 위한 좌익과 게릴라의 무장투쟁’이라는 제목 하의 내용으로 구성하면서 좌익의 무장투쟁으로 군경과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전쟁기념관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상 ‘6·25전쟁 (The Korean War)’에서도 확인되는데 남한 단독선거와 제주 4·3사건 모습을 배경으로 한 장면에서 다음과 같은 내레이션이 나옵니다.

**“제주도 4·3사건 등 공산좌익들의 끈질긴 선거 방해 책동 속에서도 인구비례에 따라 북한에 배정했던 의원 수를 남겨둔 채 한국 최초의 5·10 민주선거는 실시됐다” (영상 2분 29초~2분 41초)**

또 여순사건과 관련해서도 위의 영상에서 다음과 같은 내레이션으로 설명됩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한국군 내부의 공산 좌익군인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했고” (영상 3분 10초~3분 16초)**

제주4.3과 여순사건은 전쟁기념관에서 설명하듯 ‘공산좌익 및 북한의 선동’이나 ‘신탁통치 문제로 인한 이념 대립이 격화’를 통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미군정에 대한 반대와 함께 통일에 대한 염원을 주장하는 국민들의 저항운동이 국가의 강경진압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sup>7)</sup>**

보고서는 제주4.3의 원인에 대해 “극히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이 착종되어 있어서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고 말하며, 해방 후 제주인 6만여 명의 귀환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변동, 광복 이후 실직난, 생필품 부족, 콜레라에 의한 수백 명 희생, 극심한 흉년 등의 악재, 미군정 미곡정책의 실패, 일제경찰의 군정경찰로의 변신, 군정관리의 모리행위 등 복합적 요인을 언급합니다.<sup>8)</sup> 이를 미루어 볼 때, 제주4.3은 해방 직후의 어려운 생활

7)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536p

8)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533p

에 더해 미군정의 주민정책이 실패하자 분노한 제주도민들이 1947년 3월 1일 행사에 모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발포로 민간인이 사망함으로 촉발된 사건입니다. 또한 통일에 대한 염원으로 당시 단선·단정 반대를 외치며 당시 정권에 반대한 것입니다. 이를 ‘신탁통치 문제로 이념 대립이 격화되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본래의 맥락을 배제함으로써 당시 강경 진압을 일삼았던 국가의 잘못을 숨기는 것으로 명백한 오류입니다.

‘군경은 물론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다’는 내용은 일견 틀리지 않은 내용이지만, 피해 사실에 앞서 좌익의 무장투쟁이라는 내용을 배치함으로써 마치 좌익의 무장투쟁으로 인해서만 피해가 발생했다고 잘못 독해할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제주4.3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가해의 비율은 토벌대가 86.1%, 무장대가 13.9%로 국가 측인 토벌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sup>9)</sup> 또한 피해자의 절대 다수는 민간인이었습니다. 보고서는 군인 전사자를 180명 내외로 추정하고, 경찰 희생자를 140명으로 파악합니다.<sup>10)</sup>

‘남한의 전투력을 소모시키기 위한 좌익과 게릴라의 무장투쟁’이라는 제목은 마치 제주4.3과 여순사건을 공산 세력이 의도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느낌을 주게 합니다. 실제 제주4.3이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을 받아 이뤄졌고 이를 북한과 소련과 연계시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여러 기록을 토대로 남로당 중앙당과 제주4.3 무장대가 소속된 남로당 제주도당과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sup>11)</sup>

여순사건에 대해서는 특히 ‘공산세력의 선동’이라는 설명을 붙여 더더욱 공산 세력의 개입을 확실시하고 있지만,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에서는 여순사건의 배경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순사건의 도화선은 제14연대 내의 숙군의 위협과 제주도 파병이었지만, 그 바탕에는 당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던 여러 문제들이 얽혀 있었다. 계속되는 친일파의 발호, 해결 기미도 보이지 않는 토지개혁, 점차 줄어드는 통일정부 수립 가능성, 계속되는 정치권의 갈등과 대립, 이런 상황에서 좌익세력이 무능한 정부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선동하여 반란을 조직”<sup>12)</sup>한 것.

여순사건은 제주4.3과 같이 당시의 무능한 정부에 반대하는 흐름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여순사건 또한 남로당의 개입이 있었지만, 역시 남로당 중앙의 지령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1948년 지리산 진압군 사령관을 지낸 백선엽조차도 “여순반란사건은 결코 남로당 중앙의 지령에 의한 것이 아니다. 4.3과 마찬가지로 당 말단에서 빚어진 자의적인 행동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sup>13)</sup>

9)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536-537p

10)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374-375p

11)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162-165p

12) 진실화해추진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III』, 2010, 71-72p

13) 백선엽, 『실록 지리산』, 고려원, 1992, 157p(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에

또한 전쟁기념관은 여순사건 “반란군들이 덕유산으로 들어갔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 역시 틀린 기술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여순사건 관련 보고서는 일관되게 반군이 순천에서 구례, 광양을 거쳐 지리산으로 들어간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sup>14)</sup> 이는 사건 경과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록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정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여순사건에서도 수많은 민간인 인명피해가 있었지만, 전쟁기념관은 거기에 대해서는 적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전라남도 당국이 여순사건 발생지역 전체의 인명피해를 조사한 결과 인명피해 인원은 11,131명이었고,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되어 확인·추정된 피해 인원은 2,043명이었습니다.<sup>15)</sup> 이 중 군경의 가해로 인한 피해 인원은 1,583명<sup>16)</sup>으로, 거의 4분의 3에 달합니다. 계엄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당시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군경은 단순한 혐의만으로 민간인을 구금 혹은 연행, 사살했던 것입니다.<sup>17)</sup>

제주4.3과 여순사건은 모두 국민들의 저항운동에 국가가 강경진압으로 대응하면서 막대한 피해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에 ‘남한의 전투력을 소모시키기 위한’이라는 문구를 붙이는 것은 우선적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모욕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앞서 언급 드린 것처럼 두 차례나 대통령 차원에서의 사과가 있었고 국방부도 사과한 사건에 대해서 전쟁기념관이 여전히 좌익세력 주도의 무장투쟁으로 인한 희생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국가 차원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중대한 왜곡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언급된 내용이 반영된 내용으로 전시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3) 노량진 전투 디오라마 전시와 관련한 왜곡과 사실의 배제

북한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한강을 중심으로 방어전투를 했다는 노량진 전투와 관련해 전쟁기념관은 디오라마 방식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서 재인용, 164p)

14) “반군은 10월 21일 이후 정부군의 진압작전이 본격화되자 다시 순천으로 집결하였다가, 광양의 백운산과 구례를 거쳐 지리산으로 들어갔다.” 『진실화해위원회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순천지역 여순사건, 514p』 “진압군은 10월 23일 순천 탈환을 시작으로 10월 24일 벌교, 10월 25일 광양, 10월 26일 구례, 27일 여수를 탈환하였다. 그 뒤 반군과 지방좌익들은 구례와 광양의 백운산을 거쳐 지리산 등 인근 산악지대로 입산하여 빨치산 활동을 전개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 2010년 종합보고서 73~74p』

1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의 책, 94p

1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의 책, 111p

1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의 책, 112p

디오라마 방식의 전시는 배경을 그린 막 앞에 여러 가지 물건을 배치하고 그것을 잘 조명하여 입체적인 실물감(實物感)이 나게 하는 장치를 사용한 것으로 전쟁기념관의 경우 실제 전투가 벌어지는 것처럼 묘사하고 자막을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막 설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0년 6월 28일 만 3일 만에 서울까지 내려온 북한군이 한강 이남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국군은 한강 방어선에서 최후의 결전을 다짐한다. 국군은 01시 45분 하달된 한강교 폭파명령에 의해 2시 30분 폭파를 감행한다. 그러나 한강 인도교는 폭파되었지만 철교 폭파는 실패한다. 어느새 날이 밝아오자 북한군은 파괴되지 않은 철교를 이용하여 건너오려고 하고 미 공군 B-29 폭격기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철교폭파를 시도하는데 ...

(한강을 사이에 둔 남북 간의 교전 장면 영상)

국군 주력의 후퇴로와 서울 시민의 피난길도 함께 막히면서 조기 폭파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으나, 한강교 폭파로 한강방어선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던 북한군을 6일간이나 방어할 수 있었다.

#### <전쟁기념관의 전시내용 및 기술에 대한 문제제기와 제안>

한국전쟁 초기 한강 방어선 전투의 한 부분인 노량진 전투와 연관된 주요한 사실 하나는 그에 앞서 진행된 한강교(인도교) 폭파사건입니다.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에 폭파된 것으로 알려진 한강 인도교 폭파는 이승만 정부의 국민에 대한 무책임의 극단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군경 포함 500~800여명의 사람들을 폭사시키거나 익사시킨 이 사건은 군사작전으로서도 유효성 논란이 있고 오히려 국군의 전력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당시 군 내부에서도 한강교 폭파를 반대하는 의견이 강했고 실제 폭파계획을 취소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6월 27일 오전 11시 채병덕 총참모장이 육군본부 및 참모 및 재경부대장 회의를 열어 육군본부의 서울 철수와 함께 한강교와 철교의 폭파계획을 발표하자 이 자리에 참석한 수도경비사령관 이종찬 대령은 서울 시민의 피난조치도 강구하지 않고 군부가 먼저 철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더욱이 시민과 서울 북쪽에서 전투중인 국군의 유일한 퇴로인 한강교를 조기에 폭파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반대했습니다.<sup>18)</sup> 6월 28일 1시 45분경 총참모장이 공병감에게 한강교를 폭파하라는 명령을 하달하고 난 후 육군본부에 도착한 제5사단장 이응준 소장이 폭파에 강력히 반대하자 폭파 취소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sup>19)</sup> 한강교 조기 폭파 결정과 관련한 군 내부의 난맥상은 군사적 측면에서도

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2005, 658~659p

19) 한편 총참모장이 한강대교를 건널 즈음 육군본부에 도착한 제5사단장 이응준 소장이 참모부장 김백일 대령에게 “전방부대가 한강대교를 건넌 연후에 폭파시켜야만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 의견



중대한 오류와 치명적인 피해를 남겼습니다. 한강 이북에 있던 병력들이 고스란히 북한군의 수중에 떨어졌으며 차량과 무기 등을 모두 손실해 이후 대응에 치명적인 결과를 미쳤습니다.<sup>20)</sup> 이같은 한강교 폭파작전의 문제점과 관련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6·25전쟁사]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교 폭파 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도 미아리-회기동 방어선에서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부대에겐 철수 시간을 미리 통보하여 전선부대의 국군이 주요 화기 및 장비를 휴대한 채 부대 건재를 위한 조직적인 철수를 지도했어야 했다. 그러나 육군본부 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서울 북쪽에서 싸우고 있던 국군은 화포를 비롯한 주요 장비 및 무기를 대부분 유기한 채 한강으로 분산 철수하게 되었다. 물론 전선을 지휘하던 제5사단장 이용준 소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한강교 폭파를 연기하려 하였으나 통신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뒤늦게 육군본부에서 한강교 폭파를 저지하려 달려갔으나 때는 이미 늦었고 한강교 국군 철수와는 무관하게 원래 계획된 시간대로 한강교 폭파는 이루어져 막대한 인명피해와 장비 및 무기 손실을 입음으로써 더욱 불리한 상황에서 한강방어선 전투를 치르게 되었다.”<sup>21)</sup>

그럼에도 전쟁기념관은 인도교 폭파와 관련된 주요한 내용을 쏙 빼 채 노량진 전투를 설명하며 북한군의 진격을 지연시킨 성공적인 작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다 역사적 사실과 평가에 입각한 전시내용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강교 폭파 및 한강 방어선 전투와 관련해 전쟁기념관의 전시내용에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추가적인 내용은 한국전쟁 초기 국방부 및 정부의 대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발간한 『6·25전쟁사』에 따르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의 전면적인 남침이 있는 후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신성모가 처음 보고를 받은 시간은 3시간이 지난 뒤인 오전 7시였습니다. 그로부터 3시간 뒤인 10시에야 이승만 대통령이 군 지휘계통이 아닌 경무대 경찰서장을 통해 남침 소식을 들었고 1시간 뒤인 오전 11시에 대통령도 없는 상태에서 신성모 국방장관의 주재로 진행된 비상국무회의는 전황조차 파악되지 않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산회하고 맙니다.<sup>22)</sup>

---

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참모부장은 작전국장 장창국 대령에게 한강교 폭파를 중지시키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그 때는 육군본부와 폭파지휘소 간에 통신선이 가설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작전국장이 차량으로 폭파지휘소로 갔지만 차량과 인파 때문에 교통이 소통되지 않아 그가 중지도 부근에 도달하였을 때 한강대교는 폭파되었다. 당시 한강대교 폭파로 인해 입은 피해는 인원이 500-800명에 달하고 차량은 50대에 이르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2005, 661p>

20) 이로써 서울지역에 투입된 국군 5개 사단과 지원부대의 퇴로가 차단되고 이로 말미암아 국군 총 병력의 46%인 4만 4000여명의 병력이 흩어져 그 행방이 묘연하게 되었다. 게다가 전투 부대 및 전투 지원부대의 모든 중장비와 공용화기는 한강 이북에 유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로써 국군전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 후 이촌동 한강대교 입구에 북한군 전차가 출현한 것은 한강교가 폭파된 지 7시간 반이 지난 28일 10:00시를 조금 지나서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2005, 662p>

2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2005, 693p

2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2005, 674~675p

오후 2시에 이승만 대통령 주재로 재개된 국무회의에서 채병덕 총참모장은 북한군을 능히 격퇴할 수 있다고 안일한 보고를 했고<sup>23)</sup> 북한군에 의해 의정부가 함락된 6월 26일 밤에 경무대에서 열린 비상국무회의에서도 신성모 국방장관은 안일하고 낙관적인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서울을 버리고 수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결정되었는데 서울 시민의 철수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sup>24)</sup>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군 통수권자로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행보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의 수원 이전이 결정된 직후인 6월 27일 새벽 4시에 김장흥 총경 등 2명만을 대동하고 대구로 출발했습니다. 대구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다시 기차를 돌려 대전으로 돌아왔는데 그 시간은 6월 27일 오후 4시 30분이었습니다. 그 시각 비상국회가 소집되었고 국회는 서울시민과 더불어 수도를 사수한다는 수도사수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당시 신익희 국회의장과 조봉암 부의장이 결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경무대를 방문했으나 아무런 소통도 없이 이미 서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sup>25)</sup> 국무회의 결정대로 6월 27일 정오 무렵 한강을 건너 수원으로 이동한 각 부 장관들도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진 못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다시 대통령이 있는 충남도청으로 이동했고 그 곳에서 임시청사를 마련해야 했습니다.<sup>26)</sup> 국가와 국민이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한 상태에서 대통령 이승만은 행정부 및 국회와 아무런 소통도 없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 움직였으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승만 대통령의 행보는 한국전쟁 초기 정부와 군의 대응상황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일 것입니다. 한강교(인도교) 폭파와 더불어 전쟁기념관 전시내용에 기록되

23) 채병덕 총참모장은 “38도선 전역에 걸쳐 4만~5만 명의 북한군이 94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불법남침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각 지역의 국군부대는 대전차포로 적전차를 격퇴하면서 적절하게 작전을 전개 중에 있다. 이러한 북한의 침공은 그간에 그들이 벌여온 위장평화공세가 별다른 반응이 없으므로 조급하게 자행한 그들의 상투적인 수단으로 보며 후방사단을 진출시켜 역습을 감행하면 능히 격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국무위원들은 이렇다 할 결의사항도 없이 15:30분에 산회하고 말았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2005, 675p>

24) 정부는 의정부가 함락된 26일 밤 경무대에서 또 다시 비상국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의 특별지시를 받고 전 국무총리 이범석 장군도 참석하였다. 회의에 앞서 신성모 국방부장관이 현황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내용이 안일하고 낙관적이어서 이범석 장군이 이를 막고 “문제는 서울을 사수할 것이냐, 서울 주변에서 저항을 계속하면서 지연전을 벌일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다하지 못할 형편이라면 서울에서 철수하여 천도할 수밖에 없으니 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하여 시급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범석 장군은 계속해서 “지금의 전황으로 보아 서울 사수가 어렵다면 철수 문제로 좁혀야 할 것이며, 시민에 대한 조치와 한강교 폭파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한 후 퇴장하였다. 이어서 발언한 장기영 체신부 장관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새싹이 움튼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꿈쩍없이 남아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서울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죽어야 민주주의의 싹이 죽지 않고 힘차게 뻗어나갈 것이다”라고 하였다. 국무위원들은 이를 놓고 찬반 논쟁을 하였다. 그러나 의견은 서울 철수 쪽으로 기울어져 정부의 수원이동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서울 시민의 철수 문제는 논의조차 않은 채 산회하였다. 정부는 서울 시민철수는 고사하고 소관부서의 철수대책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채 27일 아침부터 정오 무렵까지 한강을 건너 수원으로 이동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2005, 675~676p>

25) 이로써 비상국회의 비장한 수도사수결의는 행정부의 실질적인 공백으로 정책 결정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의가 원인이 되어 210명의 의원 중에서 62명에 달하는 의원이 서울에 잔류하게 되어 국회의원 8명이 사망 또는 피살되었고 27명이 납치 또는 행방불명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2005, 656p>

2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2005, 677p

어야 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언급된 내용이 반영된 내용으로 용산 전쟁기념관의 전시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4) 인천상륙작전 과정 및 미군의 폭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사실에 대한 배제

1950년 9월 15일 이루어진 인천상륙작전과 관련해 전쟁기념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맥아더 장군

“... 인천상륙작전은 맥아더 장군의 확고한 신념이 없었다면 결행되기 어려운 작전이 었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맥아더 장군은 북한군이 3개월 동안 얻은 승리를 15일 만에 뒤집는 대 역전극을 펼쳤다...”

##### 인천상륙작전, 완벽한 기습작전의 성공

... 이 작전의 성공으로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 탈환의 길을 열었을 뿐 아니라, 낙동강 방어선에 투입된 북한군 주력 부대의 병참선을 일시에 끊고 공세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 <전쟁기념관의 전시내용 및 기술에 대한 문제제기와 제안>

인천상륙작전과 관련해 전쟁기념관은 맥아더라는 인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완벽한 기습작전이었다는 찬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군사작전에 명암이 없진 않을 것입니다. 인천상륙작전은 군사전술적 측면에서 성공적이었을 수 있으나 그 무차별성으로 인해 많은 민간인의 희생을 초래했습니다. 인천 월미도사건은 인천상륙작전을 위해 사전에 월미도에 주둔하고 있던 인민군을 소탕한다는 예비 정비 작전의 성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950년 9월 10일 미 해병 함재기들이 네이팜탄 등을 사용하여 월미도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월미도에 거주하던 주민 100여명이 희생되었습니다.<sup>27)</sup>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월미도에서의 민간인 희생과 관련한 조사보고서에서 “미군의 월미도 폭격에 대한 군사적 필요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민간인 희생을 줄이려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었으나 그런 노력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국제인도법, 전쟁법의 민간인 면제규범에 의한 민간인 구별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작전”이라 규정한 바 있습니다.<sup>28)</sup> 미군 폭격기들이 월미도에 네이팜탄을 투하해 공격한 사실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발간한 6.25전쟁사에서도 확인됩니다.<sup>29)</sup>

2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의 책, 193p

2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8년 상반기 조사보고서(제5차) 제2권 제2부 집단희생 -월미도 미군 폭격사건-』 11~12p

29) “한편 12일부터 인천의 관문인 월미도를 제압하기 위한 폭격이 개시되었다. 이 작전은 해병대 항공

인천상륙작전 과정에서의 민간인 피해와 더불어 언급되어야 할 내용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공중폭격과 관련한 민간인 피해의 양상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은 우세한 공군력을 바탕으로 인민군의 진격 예상 경로나 인민군의 군사시설 혹은 피난처로 사용될 여지가 있는 시설 등에 대대적 폭격을 가하는 전략전술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민간시설이나 민간인에 대한 보도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서 다수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sup>30)</sup> 또 미군은 점령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군사적 목표물과 주변지역을 폭격했습니다. 또한 미 공군과 해군, 해병 함재기들은 인민군과 민간인에 대한 충분한 구별 노력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폭격하여 종종 다수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sup>31)</sup>

심지어는 전폭기 조종사가 통제관에게 공격 대상이 피난민임을 알렸음에도 공격을 명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49전폭전대 소속 제7폭격대대의 1950년 9월 12일자 임무보고서에 따르면 안강리 인근의 인민군과 보급품을 공격하라는 지시를 받고 출격한 4대의 F-80 조종사들이 목표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25명의 민간인들이었습니다. 이에 조종사들은 목표대상이 피난민임을 알렸지만 통제관은 “기총소사할 것”을 조종사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조종사들은 기총사격을 실시했고 그 결과 도로 상에 있던 15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sup>32)</sup> 이 같은 사실은 당시 미 공군 자체에서 규정한 표준작전절차<sup>33)</sup>를 위반한 것이며 이 같은 사례들은 상당수 발생했습니다.<sup>34)</sup> 이 같은 사실들은 미 공군의 폭격에 의한 민간인 피해가 단지 군사작전에 따르는 부수적 피해로 볼 수 없으며 본질적인 피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진화위에 신청된 사건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전쟁 초기부터 9·28수복 무렵까지 발생한 미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은 총 141건이며 피해규모는 약 4,091명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전체 141건의 사건 중 공중폭격에 의한 사건이 90건으로 67%에 달하며 피해규모는 3,067명으로 89.6%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민간인 피해사건에 비해 여성과 아이, 노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sup>35)</sup> 이 같은 미군의 공중공격에 의한 민간인 피해는 전시 민간인 보호규범<sup>36)</sup>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그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인해 피해도 광범위합니다. 전쟁의 위험성과 참혹함에 대한 경계심을 갖기 위해서 전쟁기념관 전시내용에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민간인 피

기들이 네이팜탄을 투하하고 이어 D-Day 아침에 다시 폭격 하는 것이었으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6』, 2009, 124~125p>

3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III』 176p

3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의 책, 179~180p

3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의 책, 184p

33) [표준작전절차](Standard Operational Procedure) : 미 공군의 공중폭격작전 규정으로 전폭기 조종사나 정찰기 조종사, 전술항공통제관 통제자 중 어느 누구라도 목표지점의 적정에 대해 의심을 제기할 경우 목표물에 대한 폭격을 금지하고 있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의 책, 184p>

3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의 책, 184p

3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의 책, 196p

36) 전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법 규범으로는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제4협약)>(1948년), <헤이그 공전법규(空戰法規)>(1923) 등을 들 수 있음.

해와 더불어 미군의 공중공격에 의한 민간인 피해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언급된 내용이 반영된 내용으로 전시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2. <6.25전쟁실 II>에서의 변화 제안

### 1) 멈출 수 있었던 전투, 고지전과 그로 인한 피해사실의 배제

#### 고지쟁탈전

휴전회담 시작과 함께 동서를 잇는 155마일 전선에서는 휴전 후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고지쟁탈전이 전개되었다. 전선 자체는 별 이동이 없었고 제한적 성격의 전투가 계속되었다. 노리, 베티고지, 백마고지, 저격능선, 수도고지, 크리스마스고지, 단장의 능선, 김일성고지, 351고지 등에서 밀고 밀리는 공방전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조인 때까지 2년여에 걸쳐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군은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성장하였다.

#### 전선교착 배경

유엔군 측의 휴전제의를 거부해오던 공산군 측은 전쟁에서 더 이상의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1951년 6월 23일 소련의 유엔대표 말리크를 통하여 휴전협상을 제안하였다.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첫 번째 휴전회담이 시작되었으며 이때부터 625전쟁은 일면전쟁, 일면협상이라는 새로운 전쟁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공산군 측은 열세한 전력을 만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전회담을 이용하였고 유엔군 측은 한국정부의 휴전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최초 유엔의 참전목표인 38도선 이남지역 확보를 목표로 명예로운 휴전을 추구하고 있었다. 양측은 대규모 공세작전보다는 38도선 부근에서 전후에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기 위한 소규모 전투만을 벌이게 됨으로써 전선은 38도선 일대에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 <전쟁기념관의 전시내용 및 기술에 대한 문제제기와 제안>

고지쟁탈전(이하 고지전)은 1951년 7월 10일 휴전회담 시작 이후 정전협정일인 1953년 7월 27일까지 약 2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 기간만으로 따져도 1950년 6월 25일 개전 후 휴전회담이 시작된 1951년 7월 10일까지의 기간보다 약 두 배가 많습니다. 피해도 많았습니다. 한국전쟁 피해통계집에 나온 각 연도별 '육군'의 부상자 수를 비교해보면, 50년엔 93,554명, 51년엔 105,061명, 52년엔 111,671명, 53년엔 133,348명으로 희생자의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sup>37)</sup> 총 사망자의 인원은 알 수 없지만, 51

3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피해통계집』, 1996, 39p

년 7월부터 11월 말까지의 기간 중 유엔군에선 거의 6만 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2만 2천명 이상이 미군입니다.<sup>38)</sup> 앞선 부상자 수의 추이로 미루어 볼 때 사망자 또한 휴전회담 기간에 더 많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휴전회담 기간 중 전투를 지속할 것인지 멈출 것인지는 주요한 의제였습니다.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공산군은 처음 휴전을 제의하면서 군사활동을 중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sup>39)</sup> 하지만 당시 미 합참은 “휴전협정의 협정 시까지 적대행위는 정지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sup>40)</sup> 7월 10일 유엔군 측 수석대표 조이 제독이 서두성명에서 “전투는 휴전조건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습니다.<sup>41)</sup> 이후 유엔군은 공산군의 입장을 일부 받아들여 현재의 접촉선을 ‘잠정’ 군사분계선으로 두고 휴전협정이 30일 내에 조인되지 못할 시 이후에는 전투가 계속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공산군 측은 결국 이를 받아들였고<sup>42)</sup> 이후 협상이 2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고지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비교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휴전회담 초기 최초 잠정적으로 합의했던 군사분계선과 정전협정에서의 군사분계선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출처 :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휴전사, 1989, 요도5-138p, 요도9-302p)

결국 서로에게 실익도 없는 전투를 했던 것이고,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휴전회담 기간 동안에 상호 전투행위를 중지한다는 합의를 했다면 고지전을 통해 발생한 수많은 군인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지전의) 과정에서 국군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성장하였다”는 전쟁기념관의 기술은 멈출 수 있었던 희생에 대한 어떤 성찰도 없는 것입니다.

38) James F. Schabel, Robert . Watson 지음,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역, 『미국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 (하), 1991. 70p  
 39) James F. Schabel, Robert . Watson, 앞의 책, 26p  
 40) James F. Schabel, Robert . Watson, 앞의 책, 27p  
 41) 국사편찬위원회, 『남북한관계사료집』 1권, 1994, 4~24p(김보영, 「한국전쟁과 휴전회담 연구」,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논문, 2008, 100p에서 재인용)  
 42) 국사편찬위원회, 『남북한관계사료집』 3권, 1994, 526~532p(김보영, 앞의 글에서 재인용, 106p)

이 같은 희생과 피해는 고지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휴전회담 내내 북한 지역에선 미 공군의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북한 지역은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습니다. 1951년 7월 13일, 리지웨이 당시 유엔군사령관은 “협상기간 중 적을 타격하고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 내라”고 명령했습니다.<sup>43)</sup> 1951년 6월부터 미 공군은 철도차단 작전, 즉 보급품 이송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철도와 교량 폭격을 실시했지만,<sup>44)</sup> 같은 기간에 민간인 거주지역에도 폭격이 가해졌습니다. 김태우에 따르면, 같은 시기에 “극동공군 폭격기사령부는 보급품 집적소와 병력집중지역, 조차장 파괴라는 명목 하에 북한의 주요 도시들을 쉼 없이 공격했”습니다.<sup>45)</sup> 김태우가 인용한 미 극동공군(FEAF) 정보보고서에는 ‘7월 내내 지속된 B-29기의 도시지역 폭격은 7월 30일 함흥·진남포·겸이포의 소위 “보급품 집적소” 공격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무려 64대의 비행기가 225킬로그램 파괴폭탄 650톤을 도시 한가운데에 투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sup>46)</sup> 도시지역에 대량 폭격이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민간인 거주지역과 민간인 시설 등은 거기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1952년 6월부터는 기존 제한적으로 진행됐던 폭격전략이 ‘항공압력 전략’이라는 대대적인 폭격전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작전 하에서는 수력발전소, 저수지와 같은 시설이 추가 파괴 대상으로 지정되었고 심지어 “무작위적 건물 파괴와 인명 살상”<sup>47)</sup>조차 목표가 되었습니다. 일례로 1952년 7월 11일 미 공군의 평양지역에 대한 폭격으로 공산군 측은 1,500개의 건물이 파괴되고 7,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sup>48)</sup> “극동공군은 자체평가를 통해 진남포의 80퍼센트, 청진 65퍼센트, 해주 75퍼센트, 함흥 80퍼센트, 흥남 85퍼센트 (중략) 평양 75퍼센트, 사리원 95퍼센트, 순안 80퍼센트, 원산 80퍼센트, 신안주 100퍼센트가 파괴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sup>49)</sup>

민간인 학살도 서슴지 않는 이러한 폭격전략의 목적은 ‘유엔군사령부가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현재의 한반도 정전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sup>50)</sup>

전쟁기념관이 말하는 유엔의 ‘명예로운 휴전’이 정말로 38도선 이남지역 확보를 목표로

43) Robert F. Futrel, 『The United State Air Force in Korea 1950-1953』, 1983, 433p(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9』, 2012, 753p에서 재인용)

4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2012, 759p ; 한편, “1951~1952년 겨울이 끝날 무렵 ... 유엔군 사령부의 해-공군부대는 여전히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이들 부대에 의한 작전은 회담 테이블에서 협상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James F. Schabel, Robert . Watson, 앞의 책, 252p>

45) 김태우, 『폭격-미 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창비, 2013, 348p

46) FEAF, "FEAF Weekly Intelligence Roundup No.48," 1951.8.5., 9~10면(김태우, 앞의 책, 2013, 349p에서 재인용)

47) Randolph and Mayo, "The Application of FEAF Effort in Korea," 1952.4.12., 1~3면(김태우, 앞의 책, 362p에서 재인용)

48) Robert F. Futrel, 강승기 역, 『한국전에서의 미공군전략』, 행림출판, 1982, 467p

49) 548th RTS, "Bomb Damage Assesment of Major North Korean Cities," File K720.323A, AFHRA. In Crane(2000), 168-169p(김태우, 앞의 책, 377p에서 재인용)

50) FEAF, "FEAF Intelligence Roundup No. 78, 23-29 Feb.1951" 1951.3.1., In USAF Historical Divison, "USAF Histrical Study No. 127: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1 July 1952-27 July 1953", 1956.7.1., 25p(김태우, 앞의 책, 360p에서 재인용)

한 것이었다면, 전투는 중지될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고지쟁탈전과 폭격으로 인한 피해와 피해의 원인을 말하지 않고 ‘명예로운 휴전’이란 수식어만 붙인다고 해서 피해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일이 왜 발생했는지를 드러난 사실에 기초해 기술하는 것은 이 같은 참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상에서 언급된 내용이 반영된 내용으로 용산 전쟁기념관의 전시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2) 한국전쟁 당시 노무동원의 비인도적 상황에 대한 배제

### 전쟁지원 노무자와 한국노무단

유엔군은 1950년 7월 26일 전투병력을 절감하고 전장에 적시에 보급품을 운반하기 위해 민간인 운반단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노무자들을 흡수하여 한국노무단(KSC)을 창설하였다. 한국노무단은 총 3개 사단 및 2개 여단으로 편성, 운용되었다. 노무자들이 수행한 임무는 다양하였으며 전선부대에 탄약, 연료, 군 자재, 식량, 식수, 보급품 등을 운반해 주었음은 물론, 진지공사와 전상자 후송, 도로와 교량보수 등의 주요 역할을 수행하였다. 노무자들의 운반수단은 주로 지게나 멜빵이었는데 주요한 운반수단이었던 지게가 영어 알파벳 'A'를 닮았다고 해서 유엔군들은 노무단을 지게부대라고 불렀다. 휴전 때까지 20여만 명의 노무자가 운용되었으며, 희생자는 총 8,749명이었다. 이러한 노무자들의 지원활동에 대하여 당시 국군과 유엔군의 전투지휘관들은 한결같이 "어떤 의미에서는 전투의 절반을 그들이 치렀다"고 증언하고 있다.

### <전쟁기념관의 전시내용 및 기술에 대한 문제제기와 제안>

전쟁기념관은 노무단의 희생자를 총 8,749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공식 집계에 불과합니다. 국방군사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전쟁연구-점령정책, 노무운용, 동원』은 다부동전투에서 노무 희생자가 많은 경우 평균 50여 명씩에 이르렀다고 쓰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고증하기 어렵다고 해서 상기 수치(8,794명)에서 제외해버렸습니다.<sup>51)</sup> 전쟁초기 가장 치열한 전선 중 하나였던 낙동강방어전투에서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노무자의 죽음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임하 또한 수천 명이 기록조차 남기지 못하고 희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sup>52)</sup> 이는 후술할 한국노무단의 열악한 노동환경과도 그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노무운용은 낙동강전선 구축 이전 시기까지 각 부대 지휘관들이 민간인 차량이나 운전자

51) 양영조, 「한국전쟁시 노무운용 연구」,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연구-점령정책, 노무운용, 동원』, 1995, 136p;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다부동전투』, 1981, 199-200

52) 이임하, 「한국전쟁 전후(前後) 동원행정의 반민증성」, 역사학연구소, 『역사연구 12』, 2003, 67p



를 임의로 가두에서 동원하는 방식이거나, 민간인을 동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sup>53)</sup> 이후 노무운용의 형태는 다양했지만, 민간인운반단(CTC)을 거쳐 51년 6월 한국노무단(KSC)이 창설되고 그 중 3개 사단이 유엔군 3개 군단을, 2개 여단이 한국군 2개 군단을 지원토록 했습니다.<sup>54)</sup> 노무자는 노무동원령에 의거해 만 35세부터 만 45세까지의 남성으로서 복무기간은 6개월이었지만,<sup>55)</sup> 이러한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 노무부대 피동원자 190명을 연령별로 분류한 결과 30세 이하가 4명, 31-35세가 65명, 36-40세가 84명, 41-45세가 34명, 45세 이상 노무자가 3명<sup>56)</sup>이었고, 10대 소년이 동원되어 노무자로 복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sup>57)</sup> 또한 1953년 5월 22일 국회에서 일선 노무동원자 실태 조사 보고 내용에서는 방문한 부대의 3분의 1 가량이 10개월 이상 복무하고 있었으며, 11개월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sup>58)</sup> 이외에도 여러 가지 비인도적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복무기간의 문제 : 6개월의 복무 기간은 잘 지켜지지 않으며, 조사한 해당 부대의 3분의 1 이상은 10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었고, 심한 경우는 11개월도 있었다.

임금과 노동시간의 문제 : 해당 부대는 월급으로 660환을 받는데, 하루의 노동 시간과는 관계가 없다. 열 시간을 하든지 열여섯 시간을 하든지 월급을 똑같이 받는다. 심한 경우에는 계속 전투가 진행될 때 24시간을 일하기도 한다. 또한 1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노무자가 부상을 입거나 전사를 하면 그 봉급은 사라진다. 부상을 입거나 전사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음식과 피복의 문제 : 주식으로는 안남미와 수수, 보리 등 잡곡을 섞어서 먹는데 그 양을 계산해보면 2000-2400 칼로리 정도. 중노동을 하지 않는 인간이라도 하루 3200칼로리는 먹어야 한다고 언급. 부식으론 마른 오징어 하나를 세 명이서 나눠 먹는다. 피복은 광목보다도 얇은 천으로 된 한 벌이 지급되는데 그것으로 계속 입는다.

노동환경의 문제 : 지게가 보급되지만 지게가 좋지 않아 '하나도 지게를 사용하지 않는' 다. 노무자 중 3분의 1은 후방에서 길을 닦거나 포탄을 나르고, 3분의 2는 군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전선에서 참호를 파고 철조망을 친다. 노무자에겐 총이나 수류탄이 지급되지 않고 오로지 삽과 곡괭이만 들고 가장 먼저 최전선에 투입된다.(이진수 의원은 이것은 전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끌어다가 죽인다"라고 표현함)<sup>59)</sup>

위 조사결과를 보충하면, 노무기간이 길어진 것은 교대 인원이 보충되었을 때만 제대 수속을 밟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sup>60)</sup> 각 노무자들에게 1년간 소요되는 비용을 정리하면,

53)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지원사』, 1997, 193-194p ;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81, 41p

54) 양영조, 앞의 글, 192-197p

55) 양영조, 앞의 글, 201p

56) 동아일보, 1953년 5월 5일(이임하, 앞의 글에서 재인용, 67p)

57)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7』, 1983, 69p(이임하, 앞의 글에서 재인용, 67p)

58) 임흥순 의원,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제15회 71차, 1953, 3-4p

59) 임흥순 의원. 이진수 의원. 사회보건위원장 김용우.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제15회 71차, 1953, 3-8p

60) 양영조, 앞의 글, 207p

임금 94달러, 식량 111달러, 의복 20달러, 의료 8.6달러와 개인장비, 조직장비, 소모품 등 1년간 유지비용이 대략 295달러였습니다.<sup>61)</sup> 현대 제2군수사령부 대민과에선 1952년 2월에 5인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 유지비가 한 달에 89달러가 소요된다고 평가했습니다.<sup>62)</sup> 노무자의 연봉 94달러로는 후방의 가족을 지원하기에는 정말 턱없이 모자랐고 후방의 가족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아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노무자의 적은 봉급조차 각종 잡부금으로 징수 당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sup>63)</sup>

미군 측은 전쟁 기간 중 총 3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노무자로 동원되었다고 추정했습니다.<sup>64)</sup> 앞에서 보았듯 노무자들은 무기도 없이 문자 그대로 최전선에 동원되었고, 터무니없이 적은 봉급을 받으며 열악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노동환경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6개월이라는 복무기간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전쟁기념관의 노무동원에 대한 설명이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논문은 앞서 인용했던 양영조의 「한국전쟁시 노무운동 연구」인데, 이에 대해 이임하는 “전쟁의 효율성을 위해 민간인 노무동원은 당연하며 따라서 동원과정의 불법성이나 강압성, 그리고 피동원자들이 임무수행 중 겪은 고통이나 피해보다도 동원과 운용과정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와 반성을 통해 향후 동원정책의 좌표를 삼아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sup>65)</sup>

전쟁기념관은 노무자들의 임무수행을 치하하고 있지만, 그 임무수행이 불법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이뤄졌던 것에 대해선 말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일에 경각심을 갖게 하고 또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선 피해의 내용을 기술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이상에서 언급된 내용이 반영된 내용으로 용산 전쟁기념관의 전시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3) 이념전 및 심리전의 대상이 된 포로상황과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조치에 대한 재평가

#### 전쟁포로의 송환

61) 양영조, 앞의 글, 208p

62) 양영조, 앞의 글, 217p

63) “소생은 일선 노무자로 복무하다가 1년 반 만에야 만기되었다 하여 귀가하였습니다. 복무 중 매월 받는 대금은 천환 미만인데 어느 장교의 결혼비, 어느 상사의 생일축하금, 누구 아들의 백일, 돌 등등의 명목으로 잡부금으로 징수당하고 보면 빈 봉투만 손에 ... 누가 노무동원에 가고자 하겠습니까. ... 노무자들을 소나 도야지 취급을 당하고 있음에 우리들은 분노감을 금치 못하여 국방장관님께 호소하노니...” 포천 거주 성명미상의 노무자의 탄원서, 동아일보, 1953년 12월 23일(이임하, 앞의 글에서 재인용, 60p)

64) Stephen D. Austin, Lieutenant Colonel. Kim Tae Sam, United State Army Korean Service Corps : Unsung Heroes of the Korean War, Headquarters United State Army Korean Service Corps Battalion, 2000, 61쪽(이임하, 앞의 글에서 재인용, 60p)

65) 이임하, 앞의 글, 54

625 전쟁 중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수 많은 포로를 획득하였으며 이들 포로들은 휴전을 전후하여 4회에 걸쳐 송환되었다. 휴전협정 당시 국군과 유엔군이 획득한 공산군 포로는 132,474명이었고 공산군 측이 획득한 유엔군 포로는 11,559명이었다. 당시 남한에는 최대 17만여 명에 이르는 공산군 포로들이 거제도 등지에 수용되어 있었다. 그 중 7만 명이 넘는 반공포로들이 북으로의 송환을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 측은 포로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인도주의적 송환 원칙을 주장하였으나 공산군 측은 전원 강제 송환원칙을 고수하였다. 한국은 당시에 유엔군 측이 관리하고 있던 공산군 포로 가운데 북으로 송환되기를 거부하던 반공포로 35,698명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석방지시에 따라 1953년 6월 18일 자정을 기해 27,388명이 석방됨으로써 자유를 얻게 되었고 이후 미국으로부터 휴전 후 한국의 안보를 보장받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경제 원조를 얻어냈다. 전쟁기간 중의 포로송환 중 반공포로 석방은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6·25전쟁을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중요한 조치였다.

#### <전쟁기념관의 전시내용 및 기술에 대한 문제제기와 제안>

포로송환 의제는 휴전회담이 장기화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포로송환 문제에 있어서 전쟁기념관이 말하지 않는 것은 포로 문제가 바로 양 진영의 ‘이념대결’의 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양 진영은 “포로 문제를 양 진영의 ‘체면’이 걸린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에 교환될 포로의 규모에 집착했습니다.<sup>66)</sup> 자원송환 원칙을 정책으로 입안할 것을 제안했던 미국의 정책담당자는 공산포로가 송환될 경우 가혹한 탄압을 받을 것을 우려함과 동시에 이 정책이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즉 송환거부 포로가 많을수록 공산군 측에 타격이 된다는 것입니다.<sup>67)</sup>

포로수용소 내에서는 포로들을 대상으로 한 사상 재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1950년 10월 3일 미 국방부가 국무부장관에게 보낸 문서에는 “북한군 포로가 송환되기 전에 이들에 대한 재교육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장기적인 목표에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NSC 81/1(1950.9.8.) 22항에 따르면 이들이 정치적으로 해로운 존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위 내용에서 NSC 81/1(1950.9.8.) 22항의 내용을 보면 “포로는 심리적 목적에 따라 개발, 훈련, 활용하기 위한 원칙을 수립할 것, 한국에서 시험적인 규모의 포로에 대한 심문, 세뇌, 훈련센터를 즉시 설치하며 이 프로젝트 담당 인원은 한국어 또는 극동경험, 언어능력, 기질의 적성을 고려”해서 선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sup>68)</sup> 실제 이 같은 정책목표에 근거해 거제포로수용소 등지에서 조직적인 사상 재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같이 포로를 이념전 및 심리전의 대상으로 보고 사상 재교육을 실시한 것은 “인종, 국적, 종교적 신앙이나 정치적 의견에 근거를 둔 불리한 차별 또는 유사한 기준에 근거를 둔 기타의 모든 차별 없이 균등하게 대우할 것”을 규정한 제네바 제3협약에 위배되

66) 조성훈, 『6.25전쟁과 국군포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133p

67) 조성훈, 앞의 책, 144p

68)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6194.pdf> 6~7p

는 것입니다.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에 대한 평가에는 위와 같은 이념전으로서의 맥락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승만은 반공포로 석방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반공포로의 인권이었지만<sup>69)</sup> 동시에 “공산주의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일즉 겪어보지 못한 최대의 사상적 패배를 준 것”<sup>70)</sup>으로 치하하며, “자유진영의 승리를 기하게 하였다”<sup>71)</sup>고 평가함으로써 이념전으로서의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반공포로 석방 후 환영행사가 열렸으며 1954년에는 반공포로 석방일인 6월 18일이 ‘반공의 날’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반공포로들은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자유진영’과 그에 속한 대한민국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산 증인으로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석방된 반공포로들 중 다수는 군으로 징집되었습니다. 또한 반공포로 석방 당시 총 1,486명의 포로가 수용되어 있던 인천의 부평수용소에서 이승만의 포로 석방 명령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포로들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기관총을 발사하여 47명이 사살당하는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sup>72)</sup>

국군으로써 공산군의 포로가 되었다 남한으로 다시 송환된 국군귀환포로도 비슷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1953년 8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귀환포로를 인수받았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 내외가 직접 나가서 환영식을 개최할 정도로<sup>73)</sup> 귀환포로의 송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지만, 귀환포로들은 돌아온 즉시 LST(전차상륙함)를 타고 용초도로 이송되었습니다.<sup>74)</sup> 용초도는 본래 공산군의 포로수용소였는데, 남한을 선택해 끝내 돌아온 귀환포로를 다시 수감했던 것입니다.<sup>75)</sup> 용초도에선 사상검증이 시작되었고 포로들은 심문에 가까운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심사가 시작되면서 포로를 A,B,C로 나누는 판정이 이뤄졌습니다.<sup>76)</sup> 전체 593명 중 496명을 제외한 124명은 ‘처단’되었습니다.<sup>77)</sup> 심지어 용초도에선 국군귀환포로 다수가 자살하기까지 했습니다.<sup>78)</sup>

그리고 용초도에서 나온 국군귀환포로는 곧바로 군에 재입대해야 했습니다.<sup>79)</sup> 국군귀환포로는 본래 남한 출신이었음에도 공산군 포로였다는 이유만으로 또 다시 자유를 계속 박탈당해야만 했고, 스스로가 공산측이 아님을 계속적으로 증명하는 책임을 떠맡아야만 했던

69) 이승만 담화문, 「반공포로 석방에 대하여」, 1953.6.18.(김보영, 앞의 글에서 재인용, 245p)

70) 공보실,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제2집, 1954, 267p(이동헌, 「한국전쟁 후 '반공포로'에 대한 기억과 기념」, 『동아시아 문화연구 40』, 2006, 207p에서 재인용)

71) 황세준, 『신생의 날』, 공지사, 1954, 149p(이동헌, 앞의 글에서 재인용, 207p)

7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의 포로』, 1996, 218,219,227p

73) 조성훈, 앞의 책, 170p

74) 조성훈, 앞의 책, 170p

75) 박진홍, 『돌아온 패자』, 역사비평사, 2001, 220p

76) 조성훈, 앞의 책, 174p ; 박진홍, 앞의 책, 211-212p

77) 육본 인참부, 『포로관계 참고철』, 1953-1954(전갑생, 「한국전쟁 포로와 사진: '동양공산주의자' 인종 프레임과 폭력성 재현」, 이화사학연구소, 『이화사학연구』, 2018, 173p에서 재인용)

78) “거기에는 밧줄을 목을 매달아 죽은 동료가 달려 있었다. 한둘이 아니었다. 한꺼번에 10여 명이 덩그렇게 대들보에 매달려 있었다. ... 비극은 다음날에도 계속되었다. 목을 매단 사람은 전날에 비해 적었지만 그래도 7~8명이었다. 다음날도 4~5명이 목을 매달았다. 그렇게 동료들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이 처참하게 죽어갔다.” 박진홍, 앞의 책, 218p

79) 박진홍, 앞의 책, 222p

것입니다. 석방된 반공포로와 국군 귀환포로는 북한보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존재로 환영받았지만, 이후 그들 삶의 행보는 결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또한 반공포로 석방이 정말 전쟁기념관이 말하는 것처럼 실효성이 있었는지도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전쟁기념관은 반공포로 석방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경제 원조를 얻어냈다고 평가함으로써 반공포로 석방의 효과를 강조합니다. 이승만은 휴전회담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당시 휴전반대와 포로 송환 반대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당시 유엔군총사령관인 마크 클라크는 5월 13일 합참에 보낸 보고 서한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지금 안전보장조약을 얻어내고, 더 많은 경제원조를 획득하며, 한국민들로 하여금 그가 휴전협상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기 위하여 흥정을 하고 있다.”<sup>80)</sup>

실제로 이승만은 휴전 반대와 동시에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상호방위조약과 대미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이승만의 돌발행위가 휴전회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염려했습니다. 이에 미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6월 6일 이승만에게 ‘(1) 한국의 통일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계속 추구하되, 이를 정치협상의 "우리의 중심 과제"로 한다. (2) 휴전결정과 수락 직후에, 필리핀과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와의 조약과 같은 상호방위조약을 협상한다. (3) 전후 경제원조를 계속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서한을 보냅니다.<sup>81)</sup>

반공포로 석방 단행 전에 이미 미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경제원조를 약속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현재 오랜 위기를 겪었던 휴전회담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음에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선행되는 조건 하에 한국에서 공산군과 유엔군이 동시에 철군할 것을 요구<sup>82)</sup>한 6월 2일의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이어 6월 7일 단독복진을 불사한다는 성명을 발표<sup>83)</sup>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다가 6월 18일 반공포로 석방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이승만의 일방적인 반공포로 석방은 어렵게 합의점을 찾아가던 휴전협상의 중단을 초래하며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유엔국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특히 미국정부 내에서는 이승만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sup>84)</sup>

미국은 1953년 6월 25일 미 국무차관보 로버트슨을 보내 이승만과의 협상을 시작합니다. 이승만은 로버트슨에게 휴전협정 수락을 위한 네 가지 조건을 내놓습니다. ‘(1) 나머지 반공포로들을 중립국 포로송환위원회에 인도 (2) 정치회담은 90일 시한을 두고 개최 (3)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와 한국군 20개 사단 증강 원조 계속 (4) 상호방위조약 체결 즉시 보장’ (여기에서 한국군 20개 사단 증강 원조 문제는 이미 5월 13일 미 국방장관에 의해 인

80) FRUS 1952-1954 Vol.X V, 1010-1012p(김보영, 「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239p에서 재인용)

81) James F. Schabel, Robert . Watson, 앞의 책, 392p

82) FRUS 1952-1954 Vol.X V, 1124-1126p(김보영, 앞의 글에서 재인용, 242p)

83) 대한민국국방부정훈부, 『한국전란3년지』, 1954, B193p(김보영, 앞의 글에서 재인용, 243p)

84) ‘미 국무성 극비문서 30년 만에 공개, 에버레디 작전계획’, 중앙일보, 1984. 6. 12 보도

가된 바 있습니다.)<sup>85)</sup>

미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이에 동의하지만 네 번째 조건인 상호방위조약 체결은 상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당장 보장할 수는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협상의 전제조건으로서 전쟁 수행과 종전에 대한 유엔군사령부의 권능 인정, 유엔군사령부와 공산군 측이 합의하는 휴전협상 준수, 상호 동의에 의해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한국군은 유엔군사령관의 작전지휘권 아래 두어야 함을 제시했습니다.<sup>86)</sup> 이승만 대통령은 이날 저녁 만족스러움을 표했지만, 다시 새로운 요구조건을 걸었습니다. 상호방위조약을 휴전협정 체결 전에 매듭짓고, 정치회담이 결렬될 경우, 특히 중국군이 북한에서 철군하지 않을 때 전투를 재개하며, 유엔군 사령부가 전쟁의 승리를 추구할 때 한국군을 유엔군의 지휘 아래 둔다는 것이었습니다.<sup>87)</sup>

미 클라크 장군은 이 요구사항을 거절하고, 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통보했습니다.<sup>88)</sup> 7월 9일 이승만과 로버트슨은 비공개로 협상을 진행했고, 결국 이승만은 휴전을 거부하지 않으며 대한민국에 이익이 되는 한 한국군을 유엔군사령부 휘하에 두는 것에 동의했습니다.<sup>89)</sup> 7월 11일 미 국무부는 성명으로 이승만이 한국의 휴전에 동의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sup>90)</sup> 이승만이 본래 요구했던 휴전조건인 전 한미상호방위조약 조기체결에 대한 대답은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경제원조라는 약속은 앞서 언급했던 6월 6일 아이젠하워가 약속했던 내용 그대로 진행되었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쟁기념관이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조치를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경제원조를 얻어냈다고 기술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상에서 언급된 내용이 반영된 내용으로 용산 전쟁기념관의 전시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3. 6.25전쟁실에 추가되어야 할 항목과 내용 제안

#### 1) 시 예비검속과 보도연맹, 부역혐의자 학살 등 국가에 의한 민간인 학살

주지하다시피 한국전쟁 중 민간인 학살은 북한군은 물론 국군과 경찰, 미군 등 전쟁의 양측 모두에 의해 저질러졌습니다. 전쟁 초기 국민보도연맹사건을 통해 한국 군경에 의한 무차별적인 학살이 있었고 1950년 7월 충북 영동 황간면 노근리에서 미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 학살이 있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서울이 수복된 후 인도교 폭파 등 이유로

85) James F. Schabel, Robert . Watson, 앞의 책, 345-346p

86) FRUS 1952-1954 Vol.X V, 1278-1279p(김보영, 앞의 글에서 재인용, 247p)

87) FRUS 1952-1954 Vol.X V, 1282-1284p(김보영, 앞의 글에서 재인용, 247p)

88) FRUS 1952-1954 Vol.X V, 1285-1286p(김보영, 앞의 글에서 재인용, 248p)

89) FRUS 1952-1954 Vol.X V, 1355-1356p(김보영, 앞의 글에서 재인용, 248p)

90) FRUS 1952-1954 Vol.X V, 1368-1369p(김보영, 앞의 글에서 재인용, 250p)

피난을 가지 못하고 서울에 남았던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북한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대량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후방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빨치산 토벌을 이유로 지리산 인근 지역 주민들을 빨치산과 내통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지역에서 한국 군경에 의한 무차별적인 민간인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기념관은 국군과 경찰, 미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사실은 전시 내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기념관의 건립세력이 전쟁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적 사실들을 극복하려는 인식과 의지의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전쟁의 객관적 기술을 통해 그 실체를 기억하고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전쟁기념관의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전쟁기념관 전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민간인 학살사건과 사건의 개요를 개략적으로 제안 드립니다. 제안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하에서 제안 드리는 사건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 등 국가 차원의 조사를 통해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사건들임을 밝혀둡니다.)

####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 학살사건>

국민보도연맹은 1948년 여순사건 이후 이승만 정부의 대대적인 좌익색출로 형무소의 사상범이 넘쳐나자 좌익 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전향자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9년 4월 20일 창립되었습니다.<sup>91)</sup> 당시 정부는 국민보도연맹을 좌익전향자단체라 규정했으나 창설을 주도하고 운영한 것은 검경 등 좌익 관련 수사기관 간부여서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주도한 관변단체였습니다. 국민보도연맹원 가입과정은 말단 행정기관에 가입 인원이 할당되어 좌익경력이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가입된 경우도 있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비료나 배급 등 각종 혜택을 유인하여 가입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sup>92)</sup> 전체 가입자 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전국 규모를 추산하기는 한계가 있으나 가입과 운영을 주도한 인사들은 약 30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sup>93)</sup>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내무부 치안국은 전국 도 경찰국에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견>이라는 비상통첩을 무선전보로 보냈는데 '전국 요시찰인 전원을 경찰에서

9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의 책, 139p

9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의 책, 140p

93) 국민보도연맹의 규모에 대해서는 'NARA'(National Achie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기밀이 해제된 문서를 통해 자료가 확인되는데 1950년 6월 주한 미 대사관이 미 국무부에 보낸 보고서에 '보련(국민보도연맹의 약어) 전국 가입자 수 6만 명'이라는 내용이 확인됨. <김기진, 「미국 소재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료 조사 및 해제」, 국사편찬위원회, 『해외자료 총서 13 미국소재 한국사 자료 V』, 344p>

1949년 7월 주한 미 대사관 보고서에는 '보련원 경기 1만, 경남 3천, 경북 1만, 전북 6천, 전남 4천 명'이라는 내용이 확인됨. <김기진, 「미국 소재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료 조사 및 해제」, 국사편찬위원회, 『해외자료 총서 13 미국소재 한국사 자료 V』, 345p>

구금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습니다.<sup>94)</sup> 이후 전국적으로 좌익 혐의자에 대한 예비검속이 진행되었는데 그 중 상당수의 국민보도연맹원이 포함되었습니다.<sup>95)</sup> 이 같은 예비검속에 대해 진화위 보고서는 “계엄지역에서 반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은 민간인을 예비검속하는 것이 적법한지는 별도의 해석이 필요하다”며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루어진 예비검속은 이러한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sup>96)</sup>

이렇게 구금된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은 일정기간 구금되었다가 전선이 남하하면서 순차적으로 희생되었습니다. 군경에 의한 학살은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는데 대전형무소의 경우 진화위 조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만 267명이었으며 이들은 충남지구 CIC, 제2사단 헌병대, 대전지역 경찰 등에 의해 법적 절차 없이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집단 살해되었습니다.<sup>97)</sup> 관련 내용은 'NARA'(National Achie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내용에서도 확인되는데 1950년 7월 25일 미 CIC 분견대는 '대전에서 한국정부 1천 400명 학살, 북한도 보복학살'이라는 제목의 활동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sup>98)</sup>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 학살사건은 희생자가 너무 많아 정확한 규모조차 확인이 어려울 정도이나 진화위는 조사를 통해 한국전쟁 발발 초기부터 후퇴하는 전국의 국민보도연맹과 요시찰인들을 집단적으로 사살한 사건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가 5,129명에 이르렀다고 보고했습니다.<sup>99)</sup> 이에 진화위는 조사결과에 근거해 국가의 공식사과, 위령제 지원, 역사교과서 등에 이런 사실을 기재할 것, 전시인권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sup>100)</sup> 진화위의 조사결과 중 청원·오창 창고 보도연맹사건(166건),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225건),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사건(158건), 괴산·청원 국민보도연맹사건(79건), 경남 밀양 국민보도연맹사건(54건),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사건(53건), 경북 영덕 국민보도연맹사건(21건), 부산 사천 국민보도연맹사건(47건), 진주 국민보도연맹사건(69건), 경북 울진 국민보도연맹사건(6건), 포항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32건) 전북 국민보도연맹사건(42건), 충북 국민보도연맹사건(123건) 등 사건은 그 소관기관이 국방부인 사건들입니다.<sup>101)</sup> 이후 진화위의 권고에 따라 국방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거나 해당 지역의 지역 부대장 등이 해당 추모제에 참석해 추도사를 하는 방식으로 국방부 자체에서도 일정 사건의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사안들입니다. 따라서 진화위의 권고 취지에 맞게 전쟁기념관의 전시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라 판단됩니다.

9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의 책, 141p

95) '소집된 보도연맹원들은 곧바로 지서, 인근 창고, 경찰서 등에 수일에서 한 달 가까이 구금되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의 책, 144p>

9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의 책, 145~146p

9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의 책, 153p

98) 김기진, 「미국 소재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료 조사 및 해제」, 국사편찬위원회, 『해외자료 총서 13 미국소재 한국사 자료 V』, 391p

99)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의 책, 222p

10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의 책, 225p

10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의 책, <표-1-8>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고 및 이행 현황 중 발췌. 13~24p



## <부역 혐의 민간인 희생사건>

단독정부 수립 후 이승만 정부는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남한 정부에 따르지 않는 국민은 모두 북한 정부를 이롭게 하는 것이고 이는 곧 반국가 이적행위라 간주해 처벌했습니다.<sup>102)</sup> 한국전쟁 발발 후에는 <비상사태하 범죄처벌에 대한 특별조치령> <계엄하 군사재판에 관한 특별조치령> 등을 공포해 한강 인도교 폭파로 피난 또는 후퇴할 수 없었던 대부분의 잔류민, 패잔병을 부역자로 처벌했습니다.<sup>103)</sup>

9·28 수복 후 이승만 정부는 군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부역자 체포와 기소임무를 전담토록 했고 ‘특별조치령’에 따라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재판을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내무부 치안국은 부역자의 검거 현황보고에서 검거인원 153,825명, 자수 인원 397,090명으로 모두 550,915명에 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들 중 의식분자는 총 19,116명이었다고 하므로 검거 인원 중 13만 여명은 ‘적의 강압에 부득이 부역’한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sup>104)</sup>

수복하던 국군에 의한 부역혐의자 총살사건은 일반적으로 가평, 강화, 고양, 여주, 남양주 등 여러 지역에서 사례가 확인되며 1950년 10월 초순 경부터 1.4후퇴 전까지도 부역혐의 자들에 대한 총살은 전국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sup>105)</sup> 진화위에 따르면 신청된 518건 중 부역 혐의로 희생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2,929명이며 희생자 규모는 대략 20,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습니다.<sup>106)</sup> 이 같은 부역혐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해는 엄중한 전쟁범죄에 해당하며 그 주요한 행위자는 국군이었습니다. 관련해 진화위는 조사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으로 국가가 생명존중, 평화와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아울러 전쟁의 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안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sup>107)</sup> 따라서 한국전쟁 시기 부역 혐의 민간인 피해와 관련한 내용은 전쟁기념관의 전시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한국전쟁 시 한국 군·경과 미군 작전에 의한 민간인 학살

### · 토벌작전 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한국전쟁 시기 군경은 내부적으로 빨치산의 토벌을 위한 군사작전을 펼쳤습니다. 관련해 전쟁기념관은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후방지역작전

10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의 책, 229p

10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의 책, 229p

10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의 책, 231p

10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의 책, 232p

10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의 책, 236~237p

10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1』, 2010, 225p

우리 정부와 국민은 북한군 남침 이후 군인은 물론이고 경찰, 여군, 학도의용군(재일 학도의용군 포함), 대한청년단, 반공유격대, 노무부대, 청년방위대, 국민방위군, 소년병, 철도기관사들이 국난에 처한 조국을 구하기 위해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국민총력전을 펼쳤다. 또한 휴전회담 이후인 1951년 12월에는 지리산 일대와 후방지역에서 준동하고 있는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백야전 전투사령부를 설치하여 대대적인 공비 토벌에 나섬으로써 후방지역의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경찰의 전투 활동**  
 6·25전쟁이 발발하자 경찰은 비상경비사령부 체제로 전환하였고 후방지역 치안유지는 물론이고 북한군의 서울 진격을 막기 위해 국군과 함께 전투를 수행하였다. 이후 경찰은 군과 합동작전을 통해 영월-울진지구전투, 금강방어작전 등을 수행하였다. 낙동강 전선에서는 임시수도인 대구사수를 위해 전국 각지의 15,000여명의 경찰병력을 전투 활동에 참가시켰다. 인천상륙작전 이후에는 수복지구의 치안확보, 공비토벌, 귀순공작에 주력했다. 후방지역의 북한군 패잔병과 좌익세력들의 관공서 습격, 식량 약탈, 철도 파괴, 주민 납치 등 공비활동이 준동하자 지리산지구 전투경찰사령부,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 철도기동사령부를 설치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고, 이 작전은 휴전 이후까지 계속되었다.

**<전쟁기념관의 전시내용 및 기술에 대한 문제제기와 제안>**

전쟁기념관은 빨치산 토벌작전을 후방지역작전과 경찰의 전투활동의 제목으로 설명하며 이를 통해 후방지역의 안정을 찾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토벌작전의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피해를 입은 사실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빨치산 토벌과정에서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주되게는 후방지역 토벌작전을 전담할 목적으로 1950년 9월 창설된 11사단<sup>108)</sup>과 1951년 겨울부터 토벌작전을 지휘한 백선엽야전사령부(백야사)<sup>109)</sup>에 의해 저질러졌습니다. 진화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1사단을 중심

108) 육군본부 작전명령 216호에 의거해 창설되었으며 영호남지역에서 토벌작전을 진행. 사단장은 최덕신 준장이었고 제9연대장은 김의준 대령과 오익령 중령, 제13연대장은 유흥수 대령과 최석용 대령, 제20연대장은 박기병 대령과 박원근 중령. 임명된 장교들은 최덕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토벌작전 경험 있는 일본군 출신들이었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III』, 2010, 243~244p>

109) 이승만 정부의 후방안정의 정치적 필요 관한 청원을 당시 미8군사령관 밴플리트가 받아들여 백선엽을 사령관으로 하여 발족. 다즈 중령이 이끄는 60여명의 미 고문단의 작전지휘를 받음. 총 3만여명의 백야사 작전목적은 “국내 공산유격대의 격멸소탕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물자와 보급품 일체를 파괴하는 것”. 작전은 지리산을 포위하고 산정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가며 산간마을의 가옥과 시설을 모두 소각해 빨치산들의 거점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의 책, 255p>

백야사의 ‘전과’와 관련해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발간한 [6.25전쟁사]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이로써 1951년 11월 25일 백야사가 전주에 설치된 이래 12월 2일부터 약 3개월 보름가량 4단계에 걸쳐 진행된 백야사의 ‘쥐잡기작전’은 남부군을 비롯한 공비 주력을 대부분 섬멸하고서 1952년 3월 14일 종료되었다. 백야사가 수행한 ‘쥐잡기작전’의 전과는 공비 사살 5,009명, 생포 3,968명, 귀순 45명, 각종 무기 노획 682정(문), 은거지 파괴 341개 소 등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0』, 2012, 262p>

으로 진행된 토벌작전 과정에서 호남의 담양, 장성, 함평, 화순, 영암, 고창 등 여러 지역에서 수습에서 수백여 명의 민간인이 군경에 의해 학살되었으며 전체 규모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신원이 밝혀진 희생자 수는 2,437명에 이른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sup>110)</sup> 백야사 역시 작전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 피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백야사는 1951년 12월 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제1기 작전에서 ‘비무장 입산자’도 토벌 대상으로 간주했는데 이 비무장 입산자는 대부분 토벌을 피해 지리산으로 피난했던 일반 주민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sup>111)</sup> 또 백야사는 토벌작전이 시작되기 전 광주에 포로수용소를 만들어 토벌과정에서 생포된 일반 주민들을 수용하였는데 시설의 열악과 추위, 장티푸스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sup>112)</sup>

군경의 토벌작전 중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1951년 2월 7일 발생한 경남 거창·함양·산청사건입니다. 1951년 2월 초 제11사단 9연대가 경남 거창함양산청 등 지리산 남부지역에 토벌작전을 나간 상황에서 2월 7일 거창군 신원면에서 빨치산들과 경찰의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신원면에 진주한 9연대 3대대는 대현리, 중유리, 와룡리 주민 약 1천여명을 신원국민학교로 소집, 경찰 및 지방 유지가족만 골라낸 후 나머지를 박산 골짜기로 끌고 가 집단희생 후 휘발유를 뿌려 불태웠습니다. 이 때 희생된 사람의 수는 경찰 추산으로도 600여명에 이르렀으며 당시 3대대는 “공비 및 통비분자들을 소탕했으며 187명을 사살했다”고 연대에 전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희생된 사람들 중 젓먹이부터 16세까지의 아이들이 327명이었고 나머지는 노약자거나 부녀자로 이들은 빨치산이 아니었습니다.<sup>113)</sup> 이 사건은 당시에도 큰 문제가 되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진행되었고 당시 경남지구 계엄사령관인 김종원 대령의 집요한 방해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진상이 공개되었고 국회의 결의로 1951년 12월 제11사단 9연대장 오익균, 제3대대장 한동석은 무기징역을, 김종원은 3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sup>114)</sup>

진화위는 이 시기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군경의 토벌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의 피해규모를 추산하기 어려우나 대표적인 사건인 거창함양산청사건 등을 미루어볼 때 1950년 수복 직후, 그리고 1950년 12월부터 1951년 봄까지 진행된 지리산 토벌작전, 그리고 1951년 12월부터 1952년 3월까지 진행된 백야사 토벌작전시기 영남지역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규모는 최소 1천여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sup>115)</sup> 한국전쟁 당시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전쟁범죄에 해당하며 다시 그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쟁기념관의 전시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의 책, 250~253p

11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의 책, 256p

11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제9차) 제5권 경남 산청·거창 등 민간인 희생사건 21p

11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종합보고서 III, 258p

11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의 책, 258~259p

11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의 책, 260p

## · 노근리 학살사건

노근리 학살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에서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을 말합니다. 미국 1기병사단 7기병연대 2대대가 북한군에 밀려 후퇴하는 과정에서 피난민속에 북한군이 잠입했다고 판단해 공중폭격과 기관총 발사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다가 1999년 9월 AP통신이 이 사건에 관한 보도를 함으로써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듬해인 2000년 한미 양국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합동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01년 발표된 한미 공동발표문을 살펴보면, 해당 미군병력이 산 속 마을인 임계리와 주곡리의 주민들을 노근리 방향으로 이동시킨 정황이 인정되며, 노근리 주변지역에 대한 공중폭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미군이 피난민에 대한 사격을 가해 수 미상의 피난민이 죽거나 부상을 입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사망자 수와 관련해 한국 피해자들에 의해 영동군청에 신고된 수는 248명이나 미 참전 병사들은 이보다 적은 인원수를 증언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미 공동발표문은 조사 결론 부분에서 “한미 조사반은 철수 중이던 미군이 1950년 7월 마지막 주 노근리 주변에서 수 미상의 피난민을 살상하거나 부상을 입혔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sup>116)</sup>

이런 한미 간 조사결과에 근거해 2004년 2월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었으며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한미 간 인정이 된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쟁기념관 전시 내용에 언급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 국민방위군사건

국민방위군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은 아니지만 국가 차원에서 저질러진 군대 내 부정부패사건이자 인권유린사건입니다. 국민방위군은 1950년 12월 21일 창설된 군사조직으로, 만 17세에서 만 40세까지의 청·장년 68만여 명을 뜻합니다.<sup>117)</sup> 국민방위군은 대한청년단으로부터 시작돼 청년단 배속장교, 호국군, 청년방위대로 이어지는 예비군 및 준군사조직이 최종 통합된 조직으로서, 국민개병주의를 완성하고 병력의 신속한 동원을 위한다는 기획 하에 조직되었습니다.<sup>118)</sup>

‘국민방위군 사건’은 소집된 국민방위군 68만 여명을 경상남북도와 제주도의 52개 교육대

116) 이상의 내용은 노근리 사건과 관련해 한미 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를 담은 <한·미 공동 발표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노근리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2001>

117) 남정욱, 「국민방위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2001, 185p

118) 남정욱, 앞의 책, 185p

로 이동·수용·관리·훈련하는 과정에서 부실 운영과 간부들의 부정 비리로 인해 수많은 병력이 기아·동상·질병 등으로 사상한 사건을 말합니다.<sup>119)</sup> 서울·경기지역에서 교육대가 있는 경상도로 향하는 경부가도 및 호남국도는 군사작전 및 보급로로 유엔군이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2국민병 장정들은 소로길이나 산길을 통해 이동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1951년 극심한 추위와 장기간 행군에 따른 피로의 누적, 그리고 식량 부족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sup>120)</sup>

군 보도과에서 최종 발표한 교육대 수용 인원은 징집총수 680,380명 중 298,142명에 불과했습니다.<sup>121)</sup> 약 38만 명이 이동 과정에서 기아와 동상 등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견디지 못하고 도망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용된 인원 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된 대우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교육시설에는 12월까지 취사도구와 침구류가 준비되지 않았고, 의약품이 부족했습니다.<sup>122)</sup> 국회에서도 이같은 사태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했는데, 중간보고로 “수천 명이 굶어죽어 갔고, 귀환 장병들도 20%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며, 80%는 노동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sup>123)</sup>

또한 실제로 전사자 명부를 통해 확인된 교육대별 전사자는, 제5교육대가 1명, 제7교육대가 2명, 제9교육대가 2명, 제11교육대가 79명, 제15교육대가 1명, 제21교육대가 1명, 제26교육대가 1명, 제50교육대가 1명, 제58교육대가 10명 그리고 제5단 2지대 1명 등 총 99명입니다. 이들 전사일자는 1950년 12년 21일부터 1951년 5월 20일까지로 이는 국민방위군설치법 공포일로부터 국민방위군폐지법이 공포되는 시점으로서 시기적으로 대략 일치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조차도 국민방위군 사건은 단순히 전쟁과 겨울이라는 계절의 요인보다는 국민방위군 간부들에 의한 인재의 요인이 더 컸다고 평가합니다.<sup>124)</sup> 헌병사령부가 조사한 국민방위군의 부정액수는 현금 24억 2,111만원에 군량미 1,887가마에 이르고, 국회 조사에서는 현금과 양곡, 공금 횡령의 총계가 72억 8,164만원으로 훨씬 많습니다. 이 부정액은 대부분 유흥비와 정치자금, 무마비로 쓰였다고 합니다.<sup>125)</sup>

이 사건은 전쟁 중에도 군대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했으며 그로 인해 얼마나 참혹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확인해주는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이후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쟁기념관의 전시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119) 남정옥, 앞의 책, 141-142p

120) 남정옥, 앞의 책, 221p

121) 남정옥, 앞의 책, 222p

122) 남정옥, 앞의 책, 220p

123) 서민호 의원,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제10회 64차, 1951, 2p(남정옥, 앞의 책에서 재인용, 224p)

124) 남정옥, 앞의 책, 221p

125) 남정옥, 앞의 책, 227p

### 3) 한국전쟁 시 한국군 ‘위안부’와 연합군 ‘위안부’ 운용 등 전시성폭력

한국전쟁에서도 전시성폭력 문제가 있었습니다. 『육군본부의 6.25사변 후방전사:인사편』(이하 후방전사)에는 ‘제3장 1절 제3항 특별위안활동 사항의 2. 특수위안대’라는 항목은 특수위안대의 설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표면화한 사리만을 가지고 간단히 국가시책에 역행하는 모순된 활동이라고 단안하면 별 문제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사기양양은 물론 전쟁사실에 부수하는 불선한 폐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간 교대 없는 전투로 인하여 후방 내왕이 없으니만치 이성에 대한 동경에서 야기되는 생리작용으로 인한 성격의 변화 등으로 우울증 및 기타 지장을 초래함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 특수위안대를 설치하게 되었다.”<sup>126)</sup>

또한 “1주에 2회 군무원의 협조로 군의관의 엄격한 검진을 받고 성병에 대하여는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였다.”<sup>127)</sup>고 되어 있어, 국가의 엄격한 관리 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성의 사기 양양과 성병 전염 예방 등을 위해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관리했다는 점에서, 한국군 ‘위안부’ 역시 국가 차원의 전시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위안대’는 서울지구에 3개 소대, 강릉지구에 1개 소대, 그리고 춘천과 원주, 속초 등에 설치되었으며 ‘위안부’ 수는 총 79명이었습니다. ‘위안부’는 운영 중 일선부대의 요청에 의해 출동위안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후방전사는 ‘위안부’의 실적까지 기록해 놓고 있는데, 1952년 이 여성들을 찾은 연인원은 204,560 명이었습니다.<sup>128)</sup> “단기 4287(서기 1954)년 3월 이를 일제히 폐쇄하였다”<sup>129)</sup>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 2년 이상은 운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후방전사뿐 아니라 당시 참전했던 장군들의 회고록에서도 ‘위안소’ 운영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채명신의 회고록 『사선을 넘고 넘어』에 보면 “당시 우리 육군은 사기 진작을 위해 60여 명을 1개 중대로 하는 위안부대를 서너 개 운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sup>130)</sup> 차규현의 회고록에는 “사단 훈령부로부터 장병을 위문하려 여자 위안대가 부대 숙영지 부근에 도착하였다는 통보가 있었다. 중대 인사계 보고에 의하면 이들은 24인용 야전천막에 합판과 우의로 칸막이를 한 야전침실에 수용되었다고 하며 다른 중대병사들은 열을 서면서까지 많이 이용했다고 하였다.”<sup>131)</sup> 또한 ‘특수위안대’는 심지어 제5종 보급품(당시 보급품은 4종까지만 있었다)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김희오의 회고록에 이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sup>132)</sup>

126) 육군본부, 6·25 사변 후방전사: 인사편, 1956, 148p

127) 육군본부, 앞의 책, 148p

128) 육군본부, 앞의 책, 148-150p

129) 육군본부, 앞의 책, 149p

130) 채명신, 『사선을 넘고 넘어』, 매일경제신문사, 1994, 267p

131) 차규현, 『전투』, 병학사, 1985(박정미, 「한국전쟁기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위안소’와 ‘위안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7권 2호, 2011, 42p에서 재인용)

132) “연대 1과에서 중대별 제5종 보급품 수령 지시가 있어 가 보았더니 우리 중대에도 주간 8시간 제

한국군은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위안’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박정미가 말하듯, 국군 수뇌부가 대다수 일본군 출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sup>133)</sup> 앞서 언급한 김희오의 회고록에도 “과거 일본군대 종군경험이 있는 일부 연대 간부들이 부하 사기양양을 위한 발상으로”<sup>134)</sup> 라고 나와 있으며, 한국전쟁 시 육해공군총사령관인 정일권, 전쟁 초기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채병덕, 이후 육참총장을 이어받은 백선엽 모두 일본군 혹은 만주군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특수위안대의 소관부서였던 흠병감실(1952년 이후 정병감실의 초대감은 군 중령 박경원<sup>135)</sup>이었는데 박경원은 일제 시대 학도병으로 참전해 소대장까지 역임했던 자로서, 위안소 설립의 기획의 가능성이 있었음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sup>136)</sup>

당시 육군본부가 일본군 ‘위안부’와 같이 강제연행 방식으로 ‘위안대’를 운용했다고 보기에는 그 증거가 불충분하기에 입증이 쉽지 않지만<sup>137)</sup> 김귀옥은 채록한 구술을 토대로 해 한국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성을 추정한 바 있습니다.<sup>138)</sup>

당시 연합군 ‘위안부’도 있었습니다. 박정미는 보건부가 1951년 10월 10일에 결재한 「청소 및 접객영업 위생사무 취급요령 추가지시에 관한 건」(보방 제1726호, 이하 「접객위생지시」)이라는 문서를 근거로 정부의 연합군 ‘위안소’ 설치<sup>139)</sup>를 밝히고 있습니다. 「접객위생지시」는 ‘위안부’를 “위안소에서 외군을 상대로 위안접객을 업으로 하는 부녀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위안접객”을 분명히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위안업은 유부의 부로써 할 수 없다”고 명시해 ‘위안부’가 성판매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안부’는 각종 서류를 거부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일터를 옮기거나 여행할 경우에 보고해야 했고, 기타 필요한 지시에 응하지 않았을 때 허가가 취소되었다. 또한 한국군 ‘위안부’와 같이性病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sup>140)</sup>

이렇듯 한국군, 그리고 연합군 ‘위안소’는 국가가 설치하고 운영과 관리를 도맡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한국군 ‘위안부’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기념관 한국전쟁 전시의 대부분은 남성 군인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민간인은 물론 특히 여성의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여성이 드러나는 것은 모성화된 여성이거나 군인으로서의 여성일 뿐입니다. 전쟁에서 여성은 항상 성폭력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전쟁을 치르는 국가는 여성을 남성을 위한 ‘보급품’으로서 간주하고 여성의 몸을 관리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전시성폭력 문제는 부차적

---

한으로 6명의 위안부가 배정되어 왔다.” 김희오, 『인간의 향기』, 원민, 2000, 70-80p

133) 박정미, 앞의 글, 43p

134) 김희오, 앞의 책, 70-80p

135) 육군본부, 앞의 책, 320p

136) 김귀옥, 「한국전쟁과 한국군위안부문제를 돌아본다」, 『구술사연구』 2권 1호, 2011, 131p

137) 박정미, 앞의 글, 46p

138) 김귀옥, 앞의 글, 133p

139) 박정미, 앞의 글, 48p

140) 박정미, 앞의 글, 51-53p

인 문제가 아닌 분명한 전쟁범죄이자, 동시에 기존의 남성중심적인 전쟁 이해에서 배제되어 온 젠더 문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항목으로서 전쟁기념관의 전시에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 4. 해외파병실 전시내용의 문제점과 변화 제안

한국전쟁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전쟁기념관은 해외파병실이라는 공간을 배정해 한국군의 주요한 해외 파병 사례를 비중 있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에 대한 전시 및 설명과 마찬가지로 전쟁기념관은 한국군의 해외 파병과 관련해서도 사실의 총체적 소개는 외면하고 편향되고 왜곡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한국군의 해외 파병의 대표적 사례인 베트남전과 이라크전 파병 관련해 전쟁기념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전 관련>

###### -초입-

대한민국은 625전쟁 당시 자유 우방의 지원에 보답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베트남에 국군을 파병하였습니다.

###### 전투부대활동

베트남의 게릴라전 상황에서 치안질서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투부대의 활동이 필수적이었다. 우리나라는 1개 해병여단(청룡부대)과 2개 보병사단(맹호, 백마부대)을 베트남에 파병하여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국가가 되었다. 전쟁기간동안 군단급 규모의 우리 국군은 독자적인 작전권을 행사하며 중대전술기지 운용, 적대세력에 대한 수색, 분리 및 차단 격멸 등 국군 특유의 작전과 전술을 통해 뛰어난 활약을 했다. 국군 전투부대는 철수할 때까지 다양한 작전을 펼쳐 전술책임지역 7000여킬로미터를 평정하고 남베트남 난민 120여만 명의 정착을 지원하는 등 베트남 평화 회복에 기여했다.

##### <이라크전 관련>

2003년 3월 20일 새벽 5시 30분,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은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고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키는 후세인 정권을 축출하기 위해 '이라크 자유 작전'을 개시했다. 우리나라는 국제 평화와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다국적군 참여를 결정하고 건설공병단(서희부대)과 의료지원단(제마부대)을 파병했다. 이후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고 이라크 과도 정부가 수립되자 우리나라는 평화 정착과 재건 지원을 위해 이라크평화재건사단(자이툰부대)과 항공수송단(다이만 부대)을 추가로 파병했다. 특히 자이툰부대는 베트남 전쟁 이후 처음으로



사단급 부대를 파병한 사례였는데 민사작전과 군사작전을 모범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현지 주민들로부터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이라는 칭송을 받았다. 이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과 국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 <전쟁기념관의 전시내용 및 기술에 대한 문제제기와 제안>

한국군 해외 파병의 주요한 사례인 베트남전과 이라크전과 관련해 전쟁기념관은 일관되게 세계 평화에 기여한 군사행동이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과 관련된 전시 및 설명과 마찬가지로 이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편향되고 배제된 전시와 설명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당위성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한국군이 전쟁을 수행하며 발생한 베트남 국민들에 대한 학살사실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6월, <NARA (National Achie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미국 국립문서 기록관리청) RG(Record Group) 472>에서 기밀이 해제된 주월미군사령부 감찰부의 보고서에는 5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의 주월 한국군 해병대 2여단의 민간인 학살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공개된 보고서에는 1968년 2월 베트남 쿠앙남성 디엔반현 풍니, 풍넛 마을에서 한국 해병 2여단 1대대 1중대가 일명 괴룡1호 작전을 수행하던 중 69명의 베트남 여성과 아이들이 칼에 찔리거나 총에 맞아 죽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1968년 10월에는 베트남 쿠앙남성 쑤엔 짜 호양쩌우마을에서 한국 해병 2여단 2대대 7중대 3소대가 일명 승룡3호 작전을 수행하던 중 베트남 민간인 22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969년 4월에는 베트남 쿠앙남성 지 쑤엔현 폭미마을에서 한국 해병 2여단 2대대 6중대 1소대가 일명 승룡 10호 작전을 수행하던 중 베트남 민간인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폭미마을 사건과 관련해서는 미국, 한국, 월남군이 공동으로 조사했는데 미군의 체이스 대령, 월남군의 카오 캉 닛 중령, 한국군의 이영주 소령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공식 조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지뢰와 수류탄 폭발로 인해 지뢰제거팀에 희생자가 발생했고 저격으로 인한 고통을 당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나 마을의 남쪽 끝에서 한국 해병이 광분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sup>141)</sup>

추가로 이라크전 참전의 명분 또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과 더불어 이라크전의 유력한 참전국이었던 영국은 2016년 이라크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담은 칠콧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영국의 이라크전 참전이 총체적으로 부적절한 결정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sup>142)</sup> 전쟁 개시의 주요한 이유였던 후세인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보유도 사실이 아

141) 이상의 내용은 2000년 11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실위원회가 공개한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주월미군사령부 감찰부 보고서의 공개와 관한 보도자료’의 내용을 발췌·정리한 것입니다.<국제민주연대,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주월미군사령부 감찰부 보고서의 공개와 관한 보도자료」, 2000>

142) 영국 이라크전 ‘칠콧 보고서’ 12권 260만개 단어의 결론은 “불법 침공”, 한겨레신문, 2016. 7. 7

니었으며 테러단체에 관련 기술을 넘긴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쟁기념관은 이 같은 이라크전의 실상을 여전히 외면하고 국제평화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대한민국과 국군의 위상을 높였다고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전쟁기념관의 파병실 전시내용에 언급한 내용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 드립니다. 제안 드립은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Ⅲ. 정책제안서를 마치며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기억하라'  
(IF YOU WANT PEACE, REMEMBER WAR)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 새겨져 있는 문구입니다. 문구의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문제는 '전쟁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와 관련한 의문으로 이어집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전쟁은 한반도의 분단을 공고히 한 사건이었으며 그 영향력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북한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는 2000년 이후 이어져 온 남북 간의 대화와 화해의 움직임들을 방해하거나 부정하는 형태로 표출되었습니다. 한국전쟁 후 70여년의 시간동안 지속된 냉전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 속에 용산 전쟁기념관의 문제가 포함됩니다.

#### 끝나지 않은 전쟁,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전쟁

북한은 남조선 혁명과 한반도의 공산통일이라는 대한민국에 대한 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도발은 6.25 전쟁 중 말할 수 없는 야만성과 폭력성 그리고 잔혹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오늘날도 수십만 여건에 이르는 정전협정 위반사행들과 무장공비 침투, 대통령 암살기도, 민간 항공기 테러 등 전쟁에 버금가는 각종 도발은 대한민국 국민을 경악케 했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해군 군함인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상태를 깨트리는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며 한반도를 전쟁의 공포와 긴장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6·25전쟁은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에게 북한 공산주의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는 시대의 아픔이었다. 우리는 그 때 겪었던 참담했던 전쟁의 고통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6·25 전쟁은 끝난 전쟁이 아니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전쟁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용산 전쟁기념관 6·25전쟁 전시실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전시내용입니다. 북한을 여전히 남한을 공산화시켜 통일하려는 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2000년 이후 5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그 과정에서 탄생한 6.15 공동선언, 10.4선언,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등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성과

보도

들에 대해선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시키고 힘에 의한 평화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전쟁기념관의 전시내용은 한국전쟁 이후 70년의 시간동안 남과 북이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전쟁기념관은 제안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전쟁 당시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과 군 입장에서 볼 때 불리한 사실의 배제를 통한 방식으로 전시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기념관이 갖는 교육적 기능을 감안할 때 중요한 문제로 제기됩니다.

1년에 2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전쟁기념관을 관람하며 그 중 70만 명 이상은 어린이와 청소년기의 학생들입니다. 우리 사회와 역사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한국전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 속에는 전쟁은 왜 발생했는지, 전쟁을 막을 순 없었는지, 전쟁으로 인한 참상과 사회의 변화 등에 대한 총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다시는 같은 고통과 참상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전제에 동의한다면 적대감과 힘의 논리, 그리고 영웅과 승리 등의 메시지를 주로 말하는 전쟁기념관 전시내용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전쟁기념관의 변화를 위해서는 전쟁을 기억하는 다른 방식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 몇 가지 사례는 전쟁기념관 전시내용 변화와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77년 개관된 <오키나와평화기념자료관>은 태평양 전쟁 당시 오키나와에서 벌어진 전쟁과 관련해 전쟁을 군인의 관점에서 재현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인의 관점에서 재현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고민과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논의의 결과로 후자 중심의 전시내용을 구성하게 되었는데 주목할 만한 내용은 전쟁의 고통에 대한 증언을 전시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겪은 평범한 오키나와 사람들의 증언을 채록했고 그 과정에서 일본군이 스파이 혐의로 오키나와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사실들을 기록했습니다. 또, 일본군에 의해 강요된 오키나와 사람들의 집단죽음의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이는 전쟁의 과정에서 자국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희생의 문제를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전쟁의 실상을 전쟁피해자의 입장에서 담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994년 개관된 독일의 <바이에른 전쟁박물관>은 제1차 세계대전에 관한 내용을 전시하고 있는데 전쟁을 미화하지 않으며 냉철한 관점에서 엄격한 사실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박물관은 군사적 영광이 아닌 전쟁의 실재를 직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전쟁박물관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다른 예로 1995년 리모델링된 <베를린-칼호르스트 독일-러시아 박물관>은 기존 이데올로기적 편향에서 벗어나 학문적 연구에 바탕을 두었습니다. 이 박물관은 군사작전과 전투보다는 전쟁의 정치적 배경, 군인들의 일상, 국민들의 일상, 전쟁 포로 등을 다뤄 전쟁을 성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과

거 적대국이었던 두 국가가 협력해 만든 이 박물관은 전쟁의 고통과 일상, 사망자에 대한 기억과 애도를 중심으로 하는 인권박물관 내지 평화박물관 구상에 있어서 하나의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사례로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은 전쟁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 자국 중심주의를 넘어 전쟁의 반인권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가해자로서의 자기 책임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의 전시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시 성폭력을 다룬 상설 전시관에서는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었던 전쟁의 폭력이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내전, 분쟁 등에서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줍니다. 기획전시실에서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베트남 여성들의 고통과 목소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일본의 책임 뿐 아니라 전시 성폭력에 대한 한국군의 가해 책임을 제기하고 반성과 성찰의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는 한·일 양국이 가해자로서의 자기 역사를 마주하고 같이 고민하게 한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독-러 박물관 사례와 연관되며 이후 남북이 한국전쟁과 관련해 공동의 전시공간을 준비할 경우 협력의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쟁기념관은 일종의 시민교육의 공간이며 역사적 교훈과 함께 관람객들과의 상호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전쟁과 관련한 다양한 관점과 평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주의적 맥락에서 전쟁을 다시 해석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각을 객관화할 수 있어야 타자와 공존할 수 있으며 평화를 위한 전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전쟁기념관이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 존재한다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선 한국전쟁에 대한 북한이나 중국의 시각도 소개하고 공유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용산 전쟁기념관 한국전쟁 관련 전시내용의 변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드렸습니다. 전쟁기념관 전시내용의 구체적 각 사안마다 제안 드린 내용에 대한 국방부 및 전쟁기념사업회 측의 판단과 이후 계획에 대한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참고문헌]

### <자료>

548th RTS, "Bomb Damage Assesment of Major North Korean Cities," File K720.323A, AFHRA. In Crane, 2000

FEAF, "FEAF Intelligence Roundup No. 78, 23-29 Feb.1951" 1951.3.1., In USAF Historical Divison, "USAF Histrical Study No. 127: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1 July 1952-27 July 1953", 1956.7.1.

FEAF, "FEAF Weekly Intelligence Roundup No.48," 1951.8.5.

FRUS 1952-1954 Vol.X V

Randolph and Mayo, "The Application of FEAF Effort in Korea," 1952.4.12.

공보실,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제2집, 1954

국사편찬위원회, 『남북한관계사료집』 1권, 1994

국사편찬위원회, 『남북한관계사료집』 3권, 1994

김기진, 「미국 소재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료 조사 및 해제」, 국사편찬위원회, 『해외자료 총서 13 미국소재 한국사 자료 V』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제10회 64차, 1951  
동아일보, 1953년 5월 5일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제15회 71차, 1953

대한민국국방부정훈부, 『한국전란3년지』

동아일보, 1953년 12월 23일

육군본부, 6·25 사변 후방전사: 인사편, 1956

이승만 담화문, 「반공포로 석방에 대하여」, 1953.6.18

<정부 공식보고서>

「노근리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2001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I』, 201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III』, 2010

<저서>

A. V. 토르쿠노프 지음. 구종서 옮김,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에디터, 2003

James F. Schabel, Robert . Watson 지음,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역, 『미국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 (하), 1991

Robert F. Futrel, 『The United State Air Force in Korea 1950-1953』, 1983, 433p

Robert F. Futrel, 강승기 역, 『한국전에서의 미공군전략』, 행림출판, 1982

Stephen D. Austin, Lieutenant Colonel. Kim Tae Sam, United State Army Korean Service Corps : Unsung Heroes of the Korean War, Headquarters United State Army Korean Service Corps Battalion, 2000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지원사』, 199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피해통계집』, 199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의 포로』,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 200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6』, 200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9』, 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0』, 2012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다부동전투』, 1981

김인걸 외 편저, 『한국현대사 강의』, 돌베개, 1998

김태우, 『폭격-미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창비, 2013

남정옥, 「국민방위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2001

박태균, 『한국전쟁』, 책과함께, 2005

양영조, 「한국전쟁시 노무운용 연구」,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연구-점령정책, 노무운용, 동원』, 1995

조성훈, 『6.25전쟁과 국군포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황세준, 『신생의 날』, 공지사, 1954

#### <회고록 및 증언>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한국전쟁과 포로>

김희오, 『인간의 향기』, 원민, 2000

박진홍, 『돌아온 패자』, 역사비평사, 2001

백선엽, 『실록 지리산』, 고려원, 1992

장정문, 『머나먼 고향길』, 을유문화사, 1992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7』, 1983

차규현, 『전투』, 병학사, 1985

채명신, 『사선을 넘고 넘어』, 매일경제신문사 1994

#### <논문>

김귀옥, 「한국전쟁과 한국군위안부문제를 돌아본다」, 『구술사연구』 2권 1호, 2011

김보영, 「한국전쟁과 휴전회담 연구」,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논문, 2008

박정미, 「한국전쟁기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위안소’와 ‘위안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7권 2호, 2011

이동현, 「한국전쟁 후 '반공포로'에 대한 기억과 기념」, 『동아시아 문화연구 40』, 2006

이임하, 「한국전쟁 전후(前後) 동원행정의 반민중성」, 역사학연구소, 『역사연구 12』, 2003

전갑생, 「한국전쟁 포로와 사진: ‘동양공산주의자’ 인종 프레임과 폭력성 재현」, 이화사학연구소, 『이화사학연구』, 2018

#### <기타>

국제민주연대,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주월미군사령부 감찰부 보고서의 공개와 관한 보도자료」, 2000